
지역간 상생발전이 대한민국을 키웁니다

지역상생포럼 연구발표회

- 일시 : 2013년 1월 30일(수) 14:00~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
- 주최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행사일정

시 간		진 행 순 서	
13:30 ~ 14:00	30분	□ 등록 및 안내	
		□ 개회식	
14:00~14:05	5분	개회 및 내빈소개	이원빈 박사 (지역발전위원회)
14:05~14:10	5분	인사말	홍 철 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14:10 ~ 14:15	5분	경과보고	이원섭 박사 (지역발전위원회)
		□ 주제발표	
14:15 ~ 14:45	30분	■ 발표① : 김정호 교수 (KDI, 前 강원발전연구원장)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	
14:45~15:15	30분	■ 발표② : 허재완 교수 (중앙대학교) - 중부경제권 구축방향 -	
15:15~15:45	30분	■ 발표③ : 이정식 교수 (前 국토연구원장) - 남부경제권 구축방향 -	
15:45~16:00	25분	□ 중간휴식	
		□ 종합토론	
16:00~17:00	60분	토론사회	장명수 명예교수 (전북대)
		지정토론	김의섭 교수 (한남대)
			박시현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갑 교수 (동의대)
			손균근 부장 (국제신문)
			염돈민 센터장 (강원발전연구원)
			이상대 부장 (경기개발연구원)
			이재훈 교수 (영남대)
			장성수 교수 (제주대)
			조상필 실장 (전남발전연구원)
			황희연 교수 (충북대)

발표①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김정호 교수 (KDI, 前 강원발전연구원장)

오늘의 삶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2013. 1. 30



김 정 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차 례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II. 지역정책: 반성과 새로운 방향

III. 지역발전의 미래상

IV. 주요 추진전략

1. 지역 일자리 창출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농어촌 활성화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1. 대한민국: 영광과 도전

- **산업화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압축성장”**
 - ◆ 1962년 경제개발에 착수한지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부국으로 성장
- **경제적인 부와 함께 “민주화” 달성**
 - ◆ 국제사회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국가로 인정, 개도국이 벤치마킹하고 자 하는 첫 번째 대상 국가
- **향후 도전 : “4대 갈등 · 양극화” 해소와 30-50클럽 가입**
 - ◆ 압축성장과정으로 빚어진 계층간 격차, 세대간 격차, 대·중소기업간 격차, 수도권-지방 간 격차 등 4대 양극화 · 갈등 해소가 시급한 과제
 - ◆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인구 5천만명-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해야
 -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 IMF는 2016년 30-50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2. 지역의 현주소

-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과 취약한 지방경제**
 - ◆ 서울의 강력한 흡인력으로 지방 주요 도시들이 '지역중심지'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는 지방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 ◆ 참여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해왔으나 수도권-지방간 격차는 오히려 심화
- **강력한 중앙권력과 지방의 영향력 약화**
 - ◆ 지방자치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앙권력은 여전하며, 재정분권 없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불가능
- **지역간 삶의 질 격차와 일자리의 불균형**
 - ◆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교육, 의료 등 복지, 문화예술 및 안전 분야에서 크게 열악
 - ◆ 구직자가 선호하는 우량 기업과 좋은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
- **지역 상생발전의 미흡**
 - ◆ 동남권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을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 심화
 - ◆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취약

5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3. 지역정책의 추이

- **참여정부 이전**
 - ◆ 개발연대(1960-80년대) : 압축성장을 위해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 성장 전략을 구사,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
 - ◆ 민주화, 세계화 시대(1990년대 이후) : 지방의 개발욕구의 폭증으로 권한 및 자원배분, 개발사업 유치 등을 둘러싸고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갈등 극심
- **참여정부 : 과감한 균형발전정책 수립, 집행**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특별회계 등 강력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 그러나,
 - ◆ 개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고 경제적 비효율 야기
- **이명박 정부 : 광역적 성장기반 구축**
 - ◆ 규모경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접 시도를 묶어 5+2광역경제권을 설정하여, 광역단위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려 노력. 그러나,
 - ◆ 광역경제권의 실체가 모호하고, 광역정책 추진기제가 작동되지 않으며, 인위적인 권역설정으로 지역간 협력과 '광역화 시너지'를 얻는데 실패

6



Ⅱ 지역정책: 반성과 새로운 방향

Ⅱ. 지역정책: 반성과 새로운 방향

1. 반성과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 반성과 비판

- ◆ 중앙집권적 정책추진 : 중앙정부 시각에서 지역정책 결정
- ◆ 관 주도 정책추진 :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추진, 부작용 발생
- ◆ 정책공간단위 : 광역적 접근이 시기상조라는 비판 제기
- ◆ 이론과 현실의 간극 : 이론적이고 추상적(3차원 전략)

●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 ◆ 현실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정책
- ◆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역정책
- ◆ 지역 니즈에 충실한 지역정책
- ◆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 통합에 기여하는 지역정책
- ◆ 지역정책의 주 대상은 주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우선순위

Ⅱ. 지역정책: 반성과 새로운 방향

2. 정책 내용과 참여 주체의 기능

● 정책내용

- ◆ 성장동력 발굴,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인구 특히 젊은 층과 지역 인재의 지역 이탈을 적극 억제
-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정주공간의 정비,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도시경쟁력 제고
- ◆ 공공복지서비스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민생안전 확립
- ◆ 지역간 연계협력과 상생발전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며, 이를 지역통합의 수단으로 승화 발전
- ◆ 지역거버넌스 구축으로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분권 확대

● 참여 주체의 기능과 역할

- ◆ 중앙정부: Enabler 와 Facilitator
- ◆ 광역자치단체: Facilitator
- ◆ 기초자치단체: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주체

9



Ⅲ 지역발전의 미래상

Ⅲ. 지역발전의 미래상

1.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 국민의 행복과 지역 통합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지역

● 목표

-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전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정주환경 조성
-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청년, 장년, 노인 등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 ◆ 도시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활력 강화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창조적인 인재와 우량 기업 유치
- ◆ 지역간 상생발전
 -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등 각 지역이 공동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발전함으로써 국민통합 선도

11

Ⅲ. 지역발전의 미래상

2.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경제권’ 구축

● 구축의 필요성

- ◆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경제권을 글로벌 광역경제권(MCR)으로 육성
- ◆ 중부경제권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 한반도경제권 구축 방향

- ◆ 기본 방향
 - 3+1 한반도경제권 : 우선 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제주경제권의 2+1 글로벌 광역경제권 구축, 장기적으로 북한을 북부경제권으로 하는 3+1 한반도경제권 구축 추진
- ◆ 권역별 발전방향
 - 중부경제권 : 세계 속의 MCR
 - 남부경제권 : 동북아 속의 지역거점
 - 제주경제권 : 동북아의 해양관광거점
 - 북부경제권 : 통일 대한민국의 북부개발거점



12



IV 주요 추진전략



1 지역 일자리 창출

1. 지역 일자리 창출

1) 왜 지역 일자리가 중요한가?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계속

- ◆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인구억제 및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으나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
- ◆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 유출
 - ※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률이 50%를 상회하고, 수도권 고교 출신 중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의 85%가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

- 지역에 사람을 붙잡아 두려면 좋은 일자리 필요

- ◆ 비수도권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 ※ 2008~11년 간 전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20만개의 일자리 중 25%인 5만개 만이 비수도권에서 발생
- ◆ 수도권에는 좋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인재를 '흡인'하고 있음
 - ※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상용종사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

15

1. 지역 일자리 창출

2) 그 동안 지역정책은 일자리보다는 산업육성에 치중

- 미래성장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현재 일자리 만들기에 소홀

- ◆ 특정 선도산업 중심의 targeting 전략은 저성장, 융복합 등으로 각인되는 '뉴노멀 시대(New Normal)'에는 그 정책효과가 미흡
- ◆ 특히 미래산업 중심으로 대상업종을 선정하고 기존 기업이나 산업부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재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음

- 선도기술 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일자리와 인력 모두 부족: 인력 수준의 미스매치 현상 발생

- ◆ 선도산업 관련 기업은 수도권 대기업이어서 지역인력양성사업으로 배출된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 발생

- 일부 선도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대학은 산학협력 저조

- ◆ 대다수의 지역 기업이 산학협력에서 소외되고 있는 반면,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일부 기업은 중복, 또는 연속적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대상기업의 확대발굴 필요

- 지역산업 지원기관이 너무 많고 추진체계 복잡

- ◆ 지역산업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해 다양한 지역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취약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3)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

- 신산업 육성은 국가성장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
 - ◆ '내일의 일자리'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는 장기적, 지속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정부주도로 추진
- 지역 일자리정책은 기업육성을 통해 실현
 - ◆ 지역 일자리정책은 '산업육성' 보다는 실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핵심
 - ◆ 특히 대기업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일 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 중소기업을 잘 이해하는 지방중기청이 지역 일자리정책 총괄
 - ◆ 지방노동청 : 노동자 보호에 치중,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
 - ◆ 지식경제부 :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중점
 - ◆ 지방자치단체 : 정치적 영향과 갈등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
 - ◆ 지방중기청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현장경험이 풍부; 따라서 지역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

17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① 지역특화 중소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확대
 - ◆ 현재 미래성장산업육성 중심의 광특회계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지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사업으로 재편
 -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애로기술, 경영, 마케팅,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 복지확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수단 개발
 - 집적화 및 연계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 허용, 임대형·아파트형 공장 공급 등
- 애로기술, 뿌리기술 등 중소기업 R&D에 특화된 전문기관 역할 확대
 - ◆ 중소기업 전용R&D지원, 산학공동연구 등과 같은 연구개발역량 강화
 - ◆ 애로기술 해소, 생산기반기술개발 등에 R&D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금형 등 '뿌리산업' 육성
 - ◆ 생산기반기술 지원에 특화되어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 확대

18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①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지역별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
 - ◆ 지역의 현재 여건과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특화산업과 연관 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 육성
- 도시형 산업과 연관 기업을 육성, 저소득층 및 여성의 일자리 확대
 - ◆ 도시형 산업 및 기업의 육성을 통한 저소득층 및 여성 일자리 확대: 이를 위해 공공 주도로 도시형 산업을 위한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시설 공급
- 지역고용협약 제도의 도입
 - ◆ 지방중기청, 노동청,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기업, 노동조합,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목표와 목표달성전략 수립, 추진
- 지방중소기업 종사자 지원
 - ◆ 지방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인건비의 추가 부담 없이 직원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9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② 대학중심 산학협력에서 기업중심 “산학융합” 으로 전환

- 지역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인력의 지속적 배출
 - ◆ 지역밀착도가 높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현장교육실습 지원 강화
 - ◆ 산학융합지구 캠퍼스의 '마이스터 대학' 전환, 고급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육성
 - ◆ 공과대학에서 1~2학년 과정은 학과목 중심으로, 3~4학년에는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Co-op 과정) 개발
- 대학을 기업지원의 전진기지로 활용
 - ◆ 부처별로 분산된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규모 확대
 - 산학융합지구(지경부), 창조캠퍼스, HRD 사업(노동부)사업 등을 교과부의 LINC사업의 틀 내에서 '지역발전인력양성제도'로 통합
 - ◆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이나 인적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 내 신기술기업의 집적화 도모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 또는 부지에 창업자, 벤처기업 등이 사업화를 위한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incubator)의 확대

20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③ 지방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 기업이 입주하고 싶고,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
 - ◆ '생산기지'의 이미지가 강한 산업단지를 기업이 입주하고 싶고,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스마트화, 녹색화 지원
 - 부처별로 추진되는 QWL사업과 산업단지 재생,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 ◆ 거점 산업단지와 주변 산업단지간의 연계 협력을 확대하고, 미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미니클러스터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켜 대·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공동 교육훈련사업 등 추진
- 국내 U-Turn 기업의 지방 유치 지원
 - ◆ 해외로부터 U-turn하는 기업의 지방투자 및 정착을 위해 '엔터프라이즈 존'을 지정,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세제 및 입지비용 지원

21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④ 통합적인 지역 일자리 추진체계를 확립

- 지방중기청, 지방노동청, 지방교육청 등의 협의기구 운영
 - ◆ 지방중기청, 지방노동청, 지방교육청 등 지방행정청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와 유관정책을 논의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
 - ◆ TP, 산업단지공단, 경제자유구역청, 연구개발특구본부 등 일자리 관련 기관들도 협의기구에 참여시켜 통합적인 지역 일자리 추진체계 확립
- 창의적이고 유능한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현장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을 중심으로 창업을 활성화
 -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상업성·사업성 평가 전문기관, 고위험 기술에 투자 가능한 엔젤자본 육성
 - ◆ 창업기업에서 개발된 제품의 마케팅과 시장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확립

22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1) 지방도시 쇠퇴와 도시경제 악화의 악순환

- 대다수의 국민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국가'
 - ◆ 국민 10명중 9명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국가(2010년 도시인구 비중 90.6%)
 - ◆ 도시는 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활성화는 필수
- 지방도시 쇠퇴로 지방경제는 붕괴위기
 - ◆ 2005~10년간 전국 144개 도시 중 55개(38.1%)에서 도시쇠퇴가 진행중이고 쇠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 41개를 포함하면 96개(66.6%)에 달함
 - ◆ 지방도시의 쇠퇴는 구매력 감소→소비위축→기업위축→일자리감소→지역경제 침체 → 지역자본이탈→투자위축→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 대도시를 비롯한 지방 중추도시 대부분에서 도시쇠퇴 진행
 - ◆ 대도시에서는 도심의 쇠퇴가 가장 심각하며, 일부 중규모 도시에서도 상업지의 쇠퇴가 두드러짐
 - ◆ 중소도시에서는 인구유출과 도시경제 침체로 원도심과 주변부가 동시에 쇠퇴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의 필요성

- **도시는 경제! 특히 중추도시 경쟁력은 지역발전의 최우선 과제**
 - ◆ 지금까지의 도시정책은 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 도시경제 활성화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했고, 특히 도시쇠퇴나 지역간 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부재
- **지방 대도시의 거점·중추기능을 회복해야 중소도시도 소생 가능**
 - ◆ 지방 중추도시시는 행정·교육·의료·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공공 서비스 공급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
 - ◆ 지방대도시의 거점기능 상실은 중소도시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쇠퇴로 이어짐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
 - ◆ 지방 중추도시권을 육성해야 지방의 대도시권이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발전을 견인 가능
 - ◆ 지방 중추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을 지역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필요

25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① 지방 중추도시권의 설정과 특화 육성

-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중추도시권 설정**
 - ◆ 지역 특화발전의 거점인 대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쇠퇴된 도시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 ◆ 중추도시권의 공간 범위는 도시권내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정
-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으로 구분하여 도시권별 특화발전 모색**
 - ◆ 부산(울산, 창원)권 :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의 핵심 도시권으로 육성
 - ◆ 대도시권 : 광역시 및 50만 이상 중견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지역별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
 - ※ 대구(구미), 대전(세종, 청주), 광주(나주), 전주(익산, 군산)
 - ◆ 중소도시권 : 인구 규모 20만명 내외의 도시 중 대도시권의 영향권,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설정
 - ※ 천안·아산, 포항·경주, 여수·순천·광양, 진주·사천, 제주, 원주, 춘천, 안동·영주

26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②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원도심 및 도시 경제기반 재생 : 중심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 ◆ 원도심 재생은 도시 중심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상업·업무기능의 재생과 도심 주거기능의 회복을 동시에 추진
 - ◆ 역세권 재개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재래시장 활성화 등 도시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일자리, 상업기능의 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기성시가지의 정주환경 재생
 - ◆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및 금융·조세지원을 통해, 도심 폐가·공가 정비 또는 리모델링, 취약계층 주택개량 등 주거기능 회복과 일자리 마련에 기여
- 민자유치 활성화와 재원확보를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 도입
 - ◆ 지방도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임대부 개발방식, 민자유치, debt financing, 도시재생 기금조성(예: revolving loan fund) 등 다양한 재생금융/투융자기법 개발, 지원
 - ◆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상호협조방식, DIY, 사회적 기업형 등 다양한 재생기법 실험, 개발, 보급

27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③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지역 거점대학의 육성과 지방 명문 고교 설립·육성
 - ◆ 지방 소재 우수대학을 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 우선 지원
 - ◆ 지방도시에 명문학교 설립·육성 지원
- 도시권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 의료체계 확충
 - ◆ 대형병원을 도시권 거점병원으로 지정, 육성하고 거점병원 중심의 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 도시권내 지자체간 연계교통체계 개선
 - ◆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도로망 확충, 도시권 내부의 혼잡·단절구간 개선, 대중교통의 광역 네트워크화, 커뮤니티 버스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지원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 생활 기반시설 및 문화, 체육, 환경시설의 공동 이용
 - ◆ 도시권 단위의 하수·폐기물처리장, 체육관, 문화원 등의 공동 설립·이용사업 지원
 - ◆ 녹지공간, 보행자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도시 이미지 쇄신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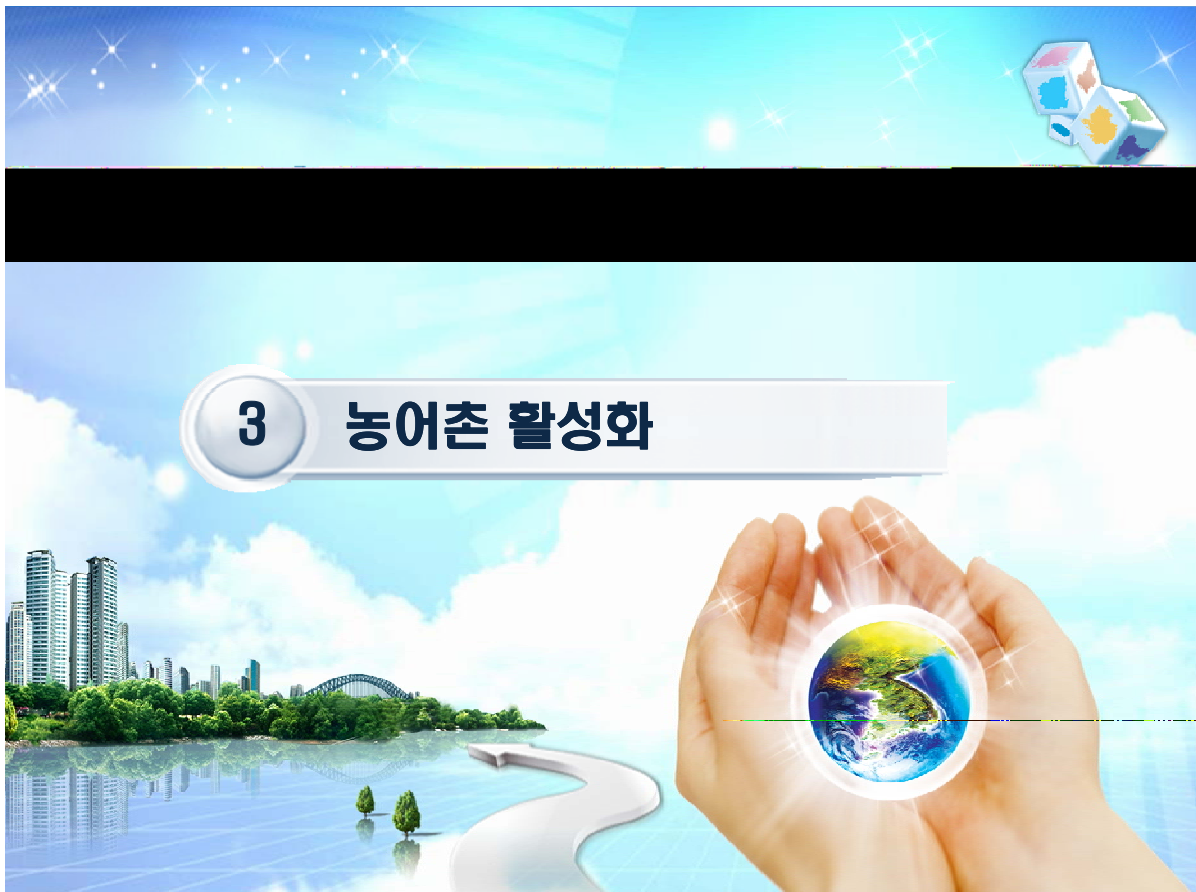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④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구축

- 중추도시의 중심기능 회복 및 생활서비스 질적 향상에 역점
 - ◆ 도시권 특화산업, 도시재생사업, 삶의 질 향상사업, 도시권 인프라 정비개선사업 등으로 유형화하여 사업 추진 및 지원체계 정비
 - ◆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선정된 사업은 특별회계를 통해 포괄지원
- 중추도시권 육성 관련 법령의 정비
 - ◆ 단기 : 균특법 개정을 통해 중추도시권 기능 회복 및 생활서비스 지원 조항 추가
 - ◆ 장기 : '중추도시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재생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도시권 계획체계, 교통망 정비에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
-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자원 확보와 지원 체계 정비
 - ◆ 광특회계를 개편하여 도시활성화 계정을 설치하고 개별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 중 중추도시권 활성화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이관하여 자원 확대

29



3. 농어촌 활성화

1) 농어촌의 오늘과 내일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공동체 붕괴와 농어촌 활력 상실
 - ◆ 최근 10년간 ('00년 ~ '10년) 도시인구 10.1% 증가, 농어촌인구 3.7% 감소
 - ◆ 65세 이상 인구비율 ('10년)은 전국 11.3%, 농어촌 20.6%
- 농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의 걸림돌
 - ◆ 도시민의 40.3%가 삶의 질에 만족, 농어촌 주민은 29.7%에 불과
 - ◆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85% 이상이 도시에 집중
 - ◆ 복식학교 비율 ('10년)은 도시 1.7%, 농어촌 28.6%
-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 증가로 향후 농어촌 인구는 증가할 전망
 - ◆ 2010년 향촌형 인구이동이 향도형 인구이동을 추월
- 향후 농어촌은 도시민과 함께 하는 정주공간, 휴양공간, 산업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으로 전환될 전망
 - ◆ 따라서, 이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농어촌 활성화 정책 추진

31

3. 농어촌 활성화

2) 기존 농어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

- 기존 농어촌 정책의 성과
 - ◆ 농어촌정책의 영역이 농어촌관광, 환경 및 경관보전 등의 분야로 확대
 - ◆ '삶의 질 특별법' 제정 (2004년)과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2008년)으로 지역의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상수도 보급률, 의료기관수 등 농어촌의 생활여건이 과거에 비해 개선
- 기존 농어촌 정책의 한계
 - ◆ 하드웨어시설 위주의 지원정책, 시설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재로 이용률 저하
 - ◆ 귀촌.귀농지원정책은 과도한 홍보 전략과 개별 지원 방식 때문에 지역활성화 효과 미흡
 - ◆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 초기단계에 있어, 지역의 역량이 부족하고 지방비 부담이 커 실제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
 -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사무국의 실질적 역할 미흡

32

3. 농어촌 활성화

3) 농어촌 활성화 정책의 주요 과제

① 중심지 읍·면을 농어촌의 생활 거점으로 육성

- 마을 단위의 분산투자로는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개선에 한계
 - ◆ 소도읍 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사업은 투자규모에 비해 지역주민의 체감효과 매우 낮음
- 농어촌 중심지인 읍·면을 공공서비스공급의 중심지와 농어촌생활 거점으로 육성
 - ◆ 기초지자체별로 1~2개 읍면을 선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초생활서비스 배치
 - ◆ 귀촌귀농인들이 농어촌 '중심지'에 정착하도록 생활환경 및 공공서비스 개선
-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복합지원센터 설치
 - ◆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도 제고
 - ◆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격지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 제공
 - ◆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시설을 운영 및 관리(사회적 일자리 창출)

33

3. 농어촌 활성화

- 공공복지 및 편의시설을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이용·관리
 - ◆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 관리비 절감 및 이용률 제고
 - ◆ 사회적 기업을 통해 시설의 이용, 관리 효율화
 - ◆ 중앙정부에서 사업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②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정책의 개선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항목별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을 차별화
 - ※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은 주거, 교통, 보건의료 등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성
 - ◆ 이행 실태가 저조한 항목별로 추가지원 등 검토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
 - ◆ 대안으로 사무국의 역할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34

3. 농어촌 활성화

③ 귀촌·귀농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귀촌·귀농 가구가 성공적으로 정착,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추진
- 귀촌·귀농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빈집, 지역일자리, 농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 제공
 - ◆ 전국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포털사이트 운영
- 민간주도의 현장밀착형 중간지원 조직 구성 및 지원
 - ◆ 귀촌·귀농인과 지역주민이 소통 및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 귀촌·귀농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지역활동가를 발굴하여 육성
- 소규모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 빈집을 리모델링, 귀촌귀농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
 - ◆ 읍·면 소재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거공간 확보
 - ◆ 향후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35

3. 농어촌 활성화

④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 각기 다른 부처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 및 예산 낭비 발생
 - ◆ 도로건설 등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미흡
- 지역발전 지표에 의해 50개 정도의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선정
 - ◆ 지역 특화자원 개발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
 - ◆ 지역 특화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
-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포괄지원을 통한 지자체 자율방식으로 추진
 - ◆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하여 재원을 차등 배분
 - ◆ 지자체간 협력 여부 및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 지자체, 주민, 지역기업, 대학 등이 공동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
 - ◆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지원 및 컨설팅 강화
 - ◆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중심으로 사업 추진, 지역일자리 창출

36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1) 재정지원의 한계와 확대 필요성

● 재정은 지역발전의 성패 좌우

- ◆ 지방분권시대에 지자체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려면 자주재원확보가 관건
- ◆ 국가재정 중 지자체 세입은 20%에 불과, 재정사용액은 42.2%, 지방채무는 증가
 - ※ 중앙, 지방, 지방교육의 재정사용액 비율은 각각 42.5%, 42.2%, 15.0%
- ◆ 지방재정의 의존 비율 59%, 국고보조금 비율 35%를 차지, 지역발전 위한 자율재원의 확대 필요(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 51.9%; 재정자주도 76.7%)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 확보 필요

- ◆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역경기 침체,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
- ◆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증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신호(지자체 총지출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 2007년 15.4% -> 2011년 28.5%)
- ◆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재정확보는 필수!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2)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

- 광특회계 : 자율성 미비, 규모 축소, 부처사업과 중복
 - ◆ 균특회계에서 광특회계로 개편시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시도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사업비 규모 축소(2009년 9.58조원 → 2012년 9.41조원)
 - ◆ 광역선도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차별성 모호; 부처간 또는 부처내 경쟁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중복 추진, 효율성 및 효과성에 의문(특히 책임성 문제 제기)
 - ◆ 재원배분 방식에서 지방비 부담제도의 채택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 포괄보조금 : 기초지자체 자율성 침해와 평가체계 부실
 - ◆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보조금 이관,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사업 기획 및 운용에 자율성 제약
 - ◆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처별 평가로 실시,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중복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 모호
- 국고보조사업 : 경직성 및 지방부담 확대와 사업 선정의 불합리
 - ◆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유형 및 사업선정 원칙이 불투명하고 '기준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비율' 설정이 불합리
 -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국가최저 또는 표준 서비스수준을 달성하는 데 한계

39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2)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

- 지방소비세 : 배분기준 및 지역간 재정격차에 대한 논란
 -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 대립 및 인식 차이로 공감대 형성 곤란
 - ◆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시도간 차등 배분되고 있으나 배분 기준에 대한 논란 증폭
 -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지역간 배분을 둘러싼 논란 지속
※ 수도권 22.5%, 비수도권 광역시 28.1%, 도 49.4%로 배분
- 지자체의 비효율적 재정지출 및 복지예산 증대로 자체사업 축소
 - ◆ 지자체의 중복 투자, 선심성 사업, 타당성 검사의 미비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
 - ◆ 지방재정 전체 세출예산 중 복지관련 예산수요 증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 축소
 - ◆ 복지사업 등 90개의 분권교부세 사업은 2014년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계획이나 급증하는 복지사업을 충당하기는 역부족

40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

① 광특회계 개편 및 운영효율 제고

● '지역활력증진특별회계(가칭)'로 개편, 4개 계정 설치

- ◆ 일자리 창출, 도시권 육성, 농어촌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분야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특화
- ◆ 지역일자리기반강화 계정 :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지방투자 촉진 관련 사업 등 지원
 - 기존사업 중 지역산업과 인력양성 등을 재편, 타 회계 사업 이관 및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은 기존의 전략, 특화산업 지원사업을 중기청 사업과 통폐합 후 재구성하여 중기청 사업으로 추진
 - 인력양성·산학협력은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Co-op 교육, 후진양성 체계 구축,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평생교육 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대학·전문대 역량 강화와 LINC 사업 지원
 -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 개편하여 U-turn 기업, 지방이전 기업 지원

41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 ◆ 도시활성화 계정 : 각 부처별 도시 관련 사업을 조정·통합하여 재원확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활성화 사업 지원
 - 기존 광특회계 사업 중 도시활력증진지역, 성장촉진지역 및 18개 기능별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권 관련 중앙부처 사업을 선별하여 기능별로 재편
 - 신규사업으로 도시권 연계교통망, 도시재생, 문화예술 테마를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 등 추진
 - 운용방식은 지자체가 계획 수립 후 관련 부처와 협의, 지역위의 조정 및 확정 후 각 지자체 별로 포괄보조금 지원
- ◆ 농어촌특화발전 계정 : 농어촌 지역의 특성화 발전, 교육·의료 등 격차완화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 지원
 - 사업 구성은 시·군 주도의 낙후지역 발전사업, 국가 주도의 삶의 질 격차 완화 지원 사업 등
 - 운영 방식은 시·도별 배분에서 시·군별 직접 배분방식으로 전환
-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기존 사업을 유지 (변화 없음)

42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 회계 및 기금간 사업 조정을 통해 회계 운용 효율화
 - ◆ 기존 광특회계에서 타 회계로 이관될 사업은 5개 단위사업, 1.3조원 규모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거점기관지원사업 등 국가R&D와 중복되는 사업, SOC사업, 국가정책 목표 하에 지정 및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 ◆ 타 회계·기금에서 신설회계로 이관될 사업은 27개 단위사업, 9,796억원 규모
 - 도시재생관련사업과 농어촌종합개발사업, 귀촌·귀농 정책관련 사업, 생활기초 인프라 관련 사업, 일자리·지역/도시경쟁력 관련 사업 등
- 포괄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 ◆ 포괄보조금사업의 배분방식인 시도별 배분을 시군구 배분으로 조정하고 공식(formula)에 의한 배분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 중앙부처는 사업지침을 간소화하여 간섭 최소화; 지자체 자율성 보장(지역발전위원회에서 침해소지 여부 검토 및 확인)

43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

② 지역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한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 ◆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 보조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 자의성 배제
 - ◆ 국고보조금의 운영 경직성 완화, 효율적 활용을 위한 책임성 강화
 - ◆ 10~100%의 기준 보조율을 5단계 내외로 간소화, 차등보조율의 합리적 조정
 - ◆ 분권교부세 제도 중 복지사무를 국가 사무로 환원, '복지교부세' 신설 검토
 -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결정 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의무화
- 지방소비세제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 재원확보
 - ◆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5% 인상을 추진하고, 배분 가중치를 조정하여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
 - ◆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상생발전사업을 지원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며, 배분 기준을 합리화, 현실화

44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

② 지역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무리한 지출을 사전에 방지
 - ◆ 재정운용시스템인 e-호조시스템과 연계하고 재정지출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 ◆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 ◆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에 '재정지출 효율성 점검 지표' 개발 추가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재정 및 민생재정 확보
 - ◆ 분권교부세를 복지교부세로 전환하고, 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며, 지방이 집행하는' 체제로 시스템 구축
 - ◆ 국고보조금 보조율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차등보조율 지표 마련)
 - ◆ 복지지출 상한제 도입: 복지지출 관련 제도정비 전까지는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수요에 대해 국가가 부담 원칙

45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1) 지역정책 집행체계: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지역정책 집행체계

- ◆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 기획, 계획 수립, 사업 평가 등의 기능 수행
- ◆ 지식경제부는 지역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광역경제권 정책을 주도하고,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부처별로 소관 사업 집행
- ◆ 지역에서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선도산업 및 인력양성 전담기관 등 설치

● 중앙 :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 ◆ 지역발전위원회는 권한, 인력, 재원이 부족하고, 광특회계예산 사전심의기능이 없는 등 범 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및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 지식경제부도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및 종합적 관리에 있어 역할 미흡

● 지방 : 지역 집행기관의 역량 부족 및 협력체계 미약

- ◆ 광역발전위원회 권한이 미약하여 지역 총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 집행기관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정책시너지 창출 제약
- ◆ 지자체는 기획, 집행, 재정에서 역량이 부족; 지자체 상호간 협력체계 부재

47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①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 지역발전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 ◆ 부처간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의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로 법적 지위 전환 검토
- ◆ 행정위원회로서 지역발전 전략 및 계획 수립, 광특회계 예산 심의, 연계협력사업 시행, 정책성과 평가, 교육훈련, 국제교류 등의 기능 수행

● 지역정책 주무부처 교체

- ◆ 주무부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정책의 총괄, 조정, 관리 기능 수행
- ◆ 기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부처 위상 및 정책관리 역량,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등을 감안한다면 타 부처로의 이관이 바람직
-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역량과 새 정부 지역정책의 기초 및 역점 시책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를 선정

48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② 지역 집행기관의 역할 강화

● 광역발전위원회 기능 재편 및 지역 집행기관 협력체계 구축

- ◆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기관 명칭, 위상, 기능을 재편하여 지역별 계획 수립, 연계협력사업 발굴, 사업 관리 및 평가, 조사·분석 등의 업무 수행
 -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에 설치
- ◆ 광역발전위원회 중심으로 TP, 선도산업지원단, 산단공, 중기청, 노동청, 국토청 등 지역 집행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광역 및 기초지자체 역할 강화

- ◆ 광역지자체: 지역개발사업 예산신청, 기초지자체 사업 기획·집행·평가 지원(TA) 및 중복 조정, 연계협력 지원 등 중개기능(Clearing House) 강화
- ◆ 기초지자체: 독자적인 사업 기획, 집행,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 지자체의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 자율성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확대, 민자유치 및 지방채 발행 지원 등 추진

49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③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

●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중요성

- ◆ 개별 지자체로는 규모경제 확보가 어렵고 예산부담이 과중한 공공서비스 공급, 지역개발사업의 비용 절감, 기업유치 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연계협력 필요

● 연계협력사업 확대

- ◆ 문화관광 및 R&D 분야에 치중된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일자리, 복지, 교육, 인프라(교통, 환경, 수자원, 방재, 안전) 등으로 확대
 - ※ 기초-기초간, 기초-광역간, 광역-광역간 협력
 - ※ 도시-도시간, 도시-농촌간, 농촌-농촌간 협력 등

● 연계협력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정비

- ◆ 광특회계 연계협력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매칭비율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 ◆ 연계협력 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간 협약체결, 추진조직 구성, 재원분담, 협약 이행장치 등을 담은 (가칭)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법 제정 추진

50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④ 지역정책 평가제도 개선

● 지역발전위원회 총괄평가 기능 강화

- ◆ 재정사업자율평가(기재부)를 지역위 평가로 일원화하고, 중앙부처의 지자체 자율 편성 사업에 대한 평가 폐지

● 지자체 평가 부담 완화 및 내실화

- ◆ 평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포괄보조사업은 내역사업 대신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평가
 - ※ 연차별로 중점사업 또는 중점 사업군을 평가하는 집중평가제 도입

● 성과중심 및 현장평가 체계 구축

- ◆ 구체적,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현장중심의 output 보다는 outcome을 중시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사업에 도움되도록 평가제도의 내실화
-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확대하고, 제도개선 반영 장치 강화

51



감사합니다

발표② : 중부경제권 구축방향

허재완 교수 (중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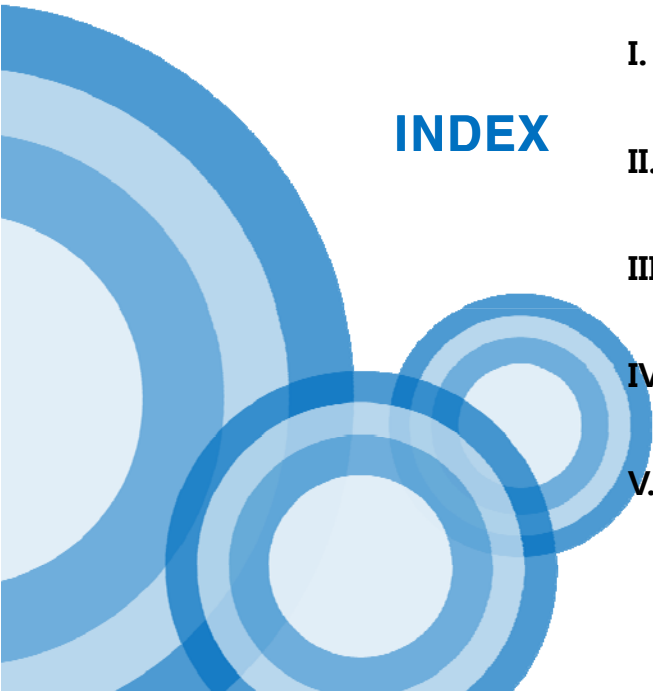
중부경제권 구축방향

2013. 1.

허재완 (중앙대)



INDEX

- 
- I. 왜 “중부경제권”인가?
 - II. 중부경제권의 공간체계구상
 - III. 중부경제권의 위상과 역할
 - IV. 역할강화를 위한 실천전략
 - V. 맺는 말

I. 왜 중부경제권인가?



‘ (MCR) ’

▪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광역경제권 개념의 유지는 지속되어야 함

- 국경을 넘어 지구촌이 하나의 경쟁단위

* 서울의 경쟁상대 → 부산 or 동경.북경 ??

- 경쟁을 이기기 위한 각국의 노력

* 인근 국가와 협력 → 지역경제블록의 형성: EU (27개국)

* 인근 도시와 협력 → 광역경제권의 형성(MCR: Mega-City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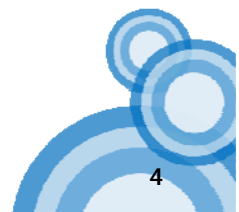
→ 협력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 경쟁력 있는 글로벌광역경제권의 형성이 필수요건

< 40대 글로벌 광역대도시권 >

- 세계 인구의 1/6

- 세계GDP의 60%, 세계기술혁신의 85%



“ 5+2 ”

■ 실제 생활권과 관계없는 행정편의주의적 접근

- 기존의 행정권역을 기계적으로 획정

* 인위적인 광역권설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작동이 불가능



“ 5+2 ”

구분	해당구역
서울권	서울특별시(02)
경기·강원권	인천광역시(032), 경기(031), 강원(033)
충청권	대전광역시(042), 충남(041), 충북(043)
영남권	부산광역시(051), 대구광역시(053), 울산(052), 경남(055), 경북(054)
호남·제주권	광주광역시(062), 전북(063), 전남(061), 제주(064)

KT의 광역전화통화권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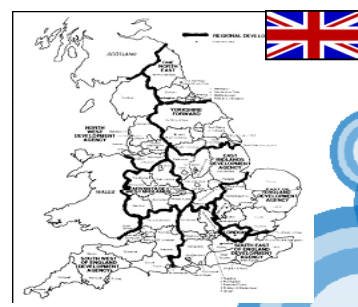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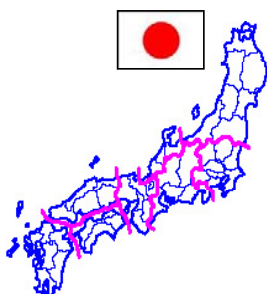
5

“ 5+2 ”

■ 규모의 경제를 취하기에는 소규모

- 기존의 행정구역을 과도하게 의식 → 진정한 의미의 “광역”이 되지 못함

	국토면적	광역경제권 수	비고
일본	377,915 (km ²)	8개	
프랑스	643,801 (km ²)	6개	
영국	243,610 (km ²)	9개	
한국	99,720 (km ²)	7개	5+2 광역경제권



6

▪ 작동가능한 글로벌 광역경제권의 조건

(i)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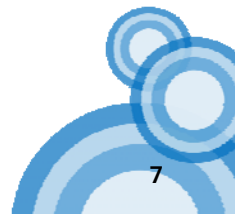
- 광역경제권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촌도시가 '기러기편대'를 형성하여야 함
- 여기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가 편대장의 역할을 하여야 함

(ii) 시장기능(Market Mechanism)이 작동할 수 있는 경제단위

-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배후 시장이 필요

(iii) 반나절 이내의 단일 생활권

- 고속(혹은 급행) 교통수단을 활용한 지역간 접근성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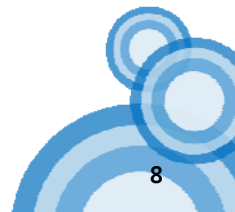
7

▪ 현 국토여건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지역은 수도권

-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존재
- 2,4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배후시장
- 지하철, 전철 등으로 1시간 이내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음

▪ 최근 고속교통수단의 확장으로 수도권의 공간범역이 빠르게 확산 중

- 이미 충청권 북부지역과 강원권 동부지역은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됨
 - * KTX개설로 천안·아산 등의 충청지역이 30분대 출퇴근 지역
 - * 경춘선·경춘 고속도로로 인해 춘천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편입 등
- 현재 건설 및 계획중인 도로나 철도가 완공될 경우 충청권 강원권 대부분이 수도권화
 - * 세종시와 관련된 교통확충사업 (제2경부고속도로 등)
 - * 서울-강릉을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
 - *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고속철도 및 도로 확충사업
 - * 서울-분당-충주 전철확장 사업 등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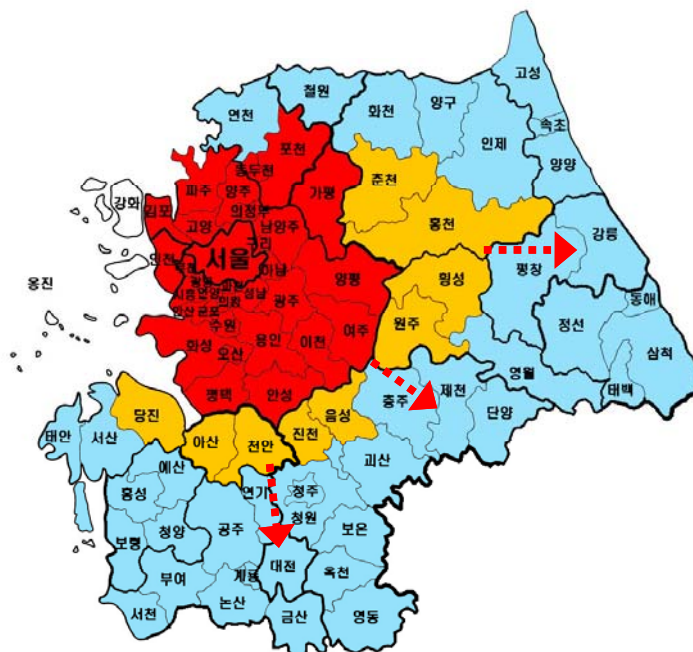
■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현상을 감안할 때 충청권 및 강원권을 포괄하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서 '중부경제권' 개념의 설정이 필요

-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수도권의 광역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계획적으로 수용하여 확대된 수도권을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

- *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권 및 충청권 일부 지역은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생활권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 * 기존의 교통시스템 및 협의체 정비를 한다면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이 '중부경제권'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가능
- * 이러한 중부경제권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9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 및 중부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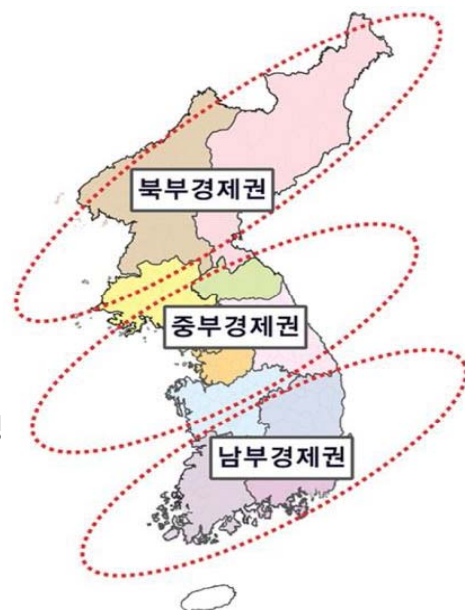
10

II. 중부경제권의 공간체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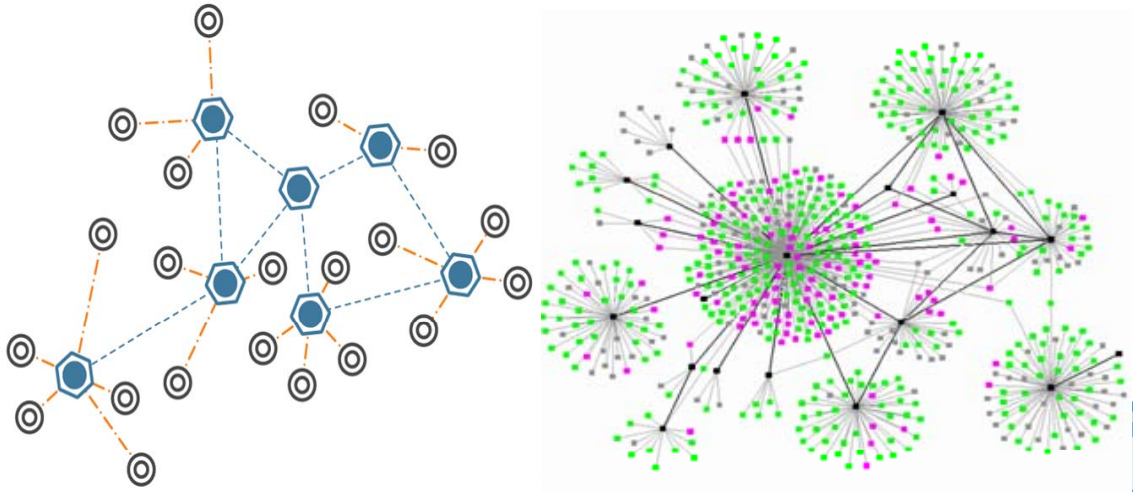
■ 중부경제권의 구성

- 한반도를 구성하는 3개 광역경제권의 하나
 - * 북부경제권 - 중부경제권 - 남부경제권
- 기존계획권역 중 3개 권역의 통합
 - * 수도권 + 충청권 + 강원권
- 1특별시, 2광역시, 1특별자치시, 4도로 구성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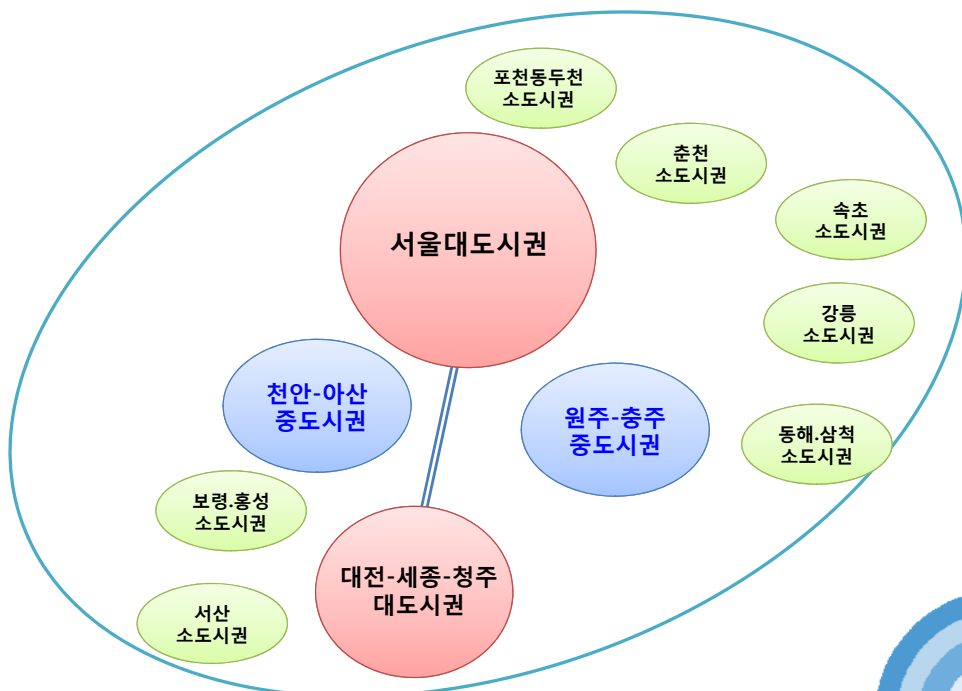
-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 등이 그물망 형태로 상호 연계



13

▪ 중부경제권의 도시권 체계

- 2 대도시권 → 서울대도시권, 대전-세종-청주 대도시권
- 2 중도시권 → 천안-아산권, 원주-충주권
- 7 소도시권 → 춘천권, 서산권, 포천·동두천권, 보령·홍성권, 강릉권, 동해·삼척권, 속초권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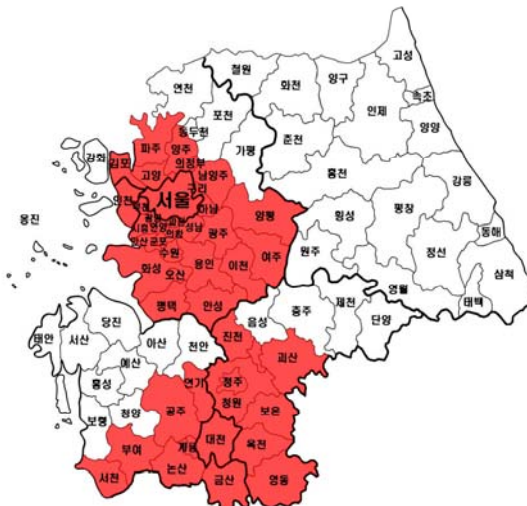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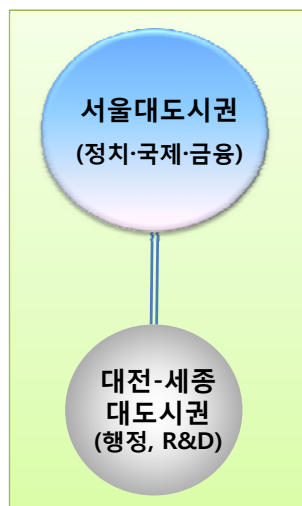
■ 중부경제권 도시권 구성

도시권	중심도시	배후도시	인구(천명)	면적(km ²)
대도시권	서울·인천·수원·고양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부천시,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광주시, 포천시, 화성시, 오산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안성시, 평택시	24,571,900	10,186
	대전·세종·청주	계룡시, 논산시,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3,153,602	8,281
중도시권	천안아산	-	822,864	1,127
	원주충주	제천시, 음성군, 영월군, 횡성군, 단양군	867,994	6,165
소도시권	춘천	가평군,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476,782	6,955
	서산	당진군, 태안군	368,618	1,941
	포천동두천	연천군, 철원군	348,416	2,393
	보령홍성	예산군, 청양군	314,967	2,034
	강릉	평창군	262,125	2,504
	동해삼척	태백시, 정선군	259,191	2,890
	속초	고성군, 양양군	142,343	1,394
소도읍권	강화군	-	67,104	411
	웅진군	-	18,739	172

15

■ 대도시권 체계 → 1핵, 1부핵 대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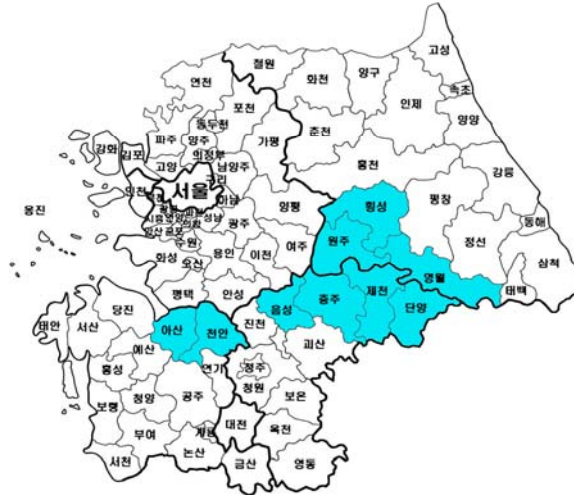
- 1핵에는 서울, 인천 및 서울주변 경기도 도시들이 해당 (서울 대도시권)
 - * 1핵은 고차위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글로벌 중심 도시권
- 1부핵은 대전, 세종, 청주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해당됨
 - * 부핵은 서울 대도시권의 기능을 분담하는 중부경제권의 중심축



16

■ 중도시권 체계 →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중규모 도시권

- 인구 50만~100만 미만의 2개 중도시권
 - * 천안·아산권, 원주·충주권
- 중도시권은 지방 중규모 도시권으로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
 - * 1핵, 1부핵의 대도시권과 연계 및 주변 소도시권의 중심지 역할
 - * 특화기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17

중도시권	기 능	비 고
천안·아산권	-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지향 * 기초·응용과학 연구 특구 * 디스플레이와 IT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 조성 -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특화산업 육성 * 과학벨트 조성	
원주·충주권	- 의료산업 및 R&D클러스터 조성 * 바이오산업의 연계 사업 추진 * 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는 입지기반 조성 - 레저스포츠, 의료 휴양관광산업의 연계 모색	

18

■ 소도시권 체계 → 주변지역의 생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소규모 도시권

- 인구 50만 이하의 7개 소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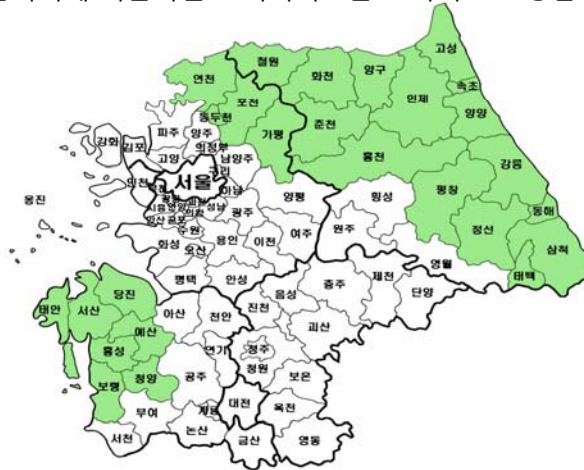
* 포천동두천권

* 춘천권, 속초권, 강릉권, 동해·삼척권

* 서산권, 보령·홍성권

- 소도시권들은 낙후지역인 주변 농촌지역들의 생활중심지 역할을 수행

* 주변 농촌지역에 기본적인 도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



19

소도시권	기 능
포천·동두천권	- 지역의 청정환경, 향토문화, 접경지역 등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활성화 * 저탄소 녹색관광의 활성화 - 전통 제조업(가구, 섬유)구조고도화 추진 및 슬로우푸드, 평화·안보 클러스터 조성 * 평화산업단지 조성
서산권	- 태안-서산-당진-아산-천안 북부축을 중심으로 내륙 및 첨단신산업 복합지대 형성 * 천안아산과 함께 환황해경제권의 생산 및 교역거점,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 - 동북아 물류 및 임해형 신산업 중심도시 * 국제교류의 게이트웨이 및 서해안 개발의 거점 지대로 육성
보령·홍성권	- 지방 중추행정 중심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 세종시-공주-청양-보령의 중부축을 중심으로 서해안과 중부내륙 연계 문화·관광·물류지대 육성 *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 및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 연안개발 관리 및 산업구조 고도화

20

소도시권	기 능
춘천권	-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DMZ부근에 지오파크 추진 * 지오파크 인근 지역 평화빌리지 조성 - 레저스포츠 및 관광객 이용시설과 문화관광 축제의 융·복합
강릉권	- 비철금속 클러스터와 탄광지역의 희소금속산업 클러스터의 연계 * 『Global Top Stem material의 거점지대』를 조성 * 풍부한 광물자원과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산업 특화계획 수립 *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속초권	- 양양공항의 2018년 평창올림픽 지정공항으로서의 역할 증대 * 양양국제공항의 북방진출 거점 공항화 - 해양관광거점 도시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연어를 중심으로 연어산업을 집중 육성 * 계절별 축제를 유치하여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동해.삼척권	- 에너지 소비변화를 반영한 녹색에너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 수소융합 연구 생산 클러스터 조성 * 석탄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환동해권 해양물류 도시로 발전

III. 중부경제권의 위상 및 역할

■ 중부경제권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경제 중심지

- 중부경제권은 한반도 전체 총생산(GDP)의 약 61%를 차지

* 면적은 20%, 인구는 42%를 차지

	인구(명)	면적(km ²)	인구밀도	GRDP(백만원)
한반도경제권	72,110,388 (100.0%)	223,350.2 (100.0%)	484.8명	1,172,742,223 (100.0%)
중부경제권	30,349,803 (42.1%)	45,277.6 (20.3%)	670.3명	728,763,554 (60.9%)
남부경제권	17,698,585 (24.5%)	53,086.0 (23.4%)	333.4명	433,509,939 (36.2%)
북부경제권	24,062,000 (33.4%)	123,138.0 (56.3%)	195.4명	24,236,800 (2.9%)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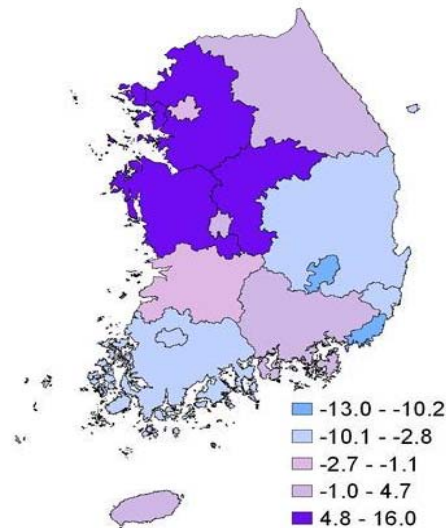
23

■ 중부경제권은 2040년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

- 향후 인구감소시대 도래에도 불구하고 중부경제권만 유일하게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

* 인구밀도가 670.3명으로 남부경제권의 2배, 북부경제권의 3.4배에 달함

2010년 대비 2040년 인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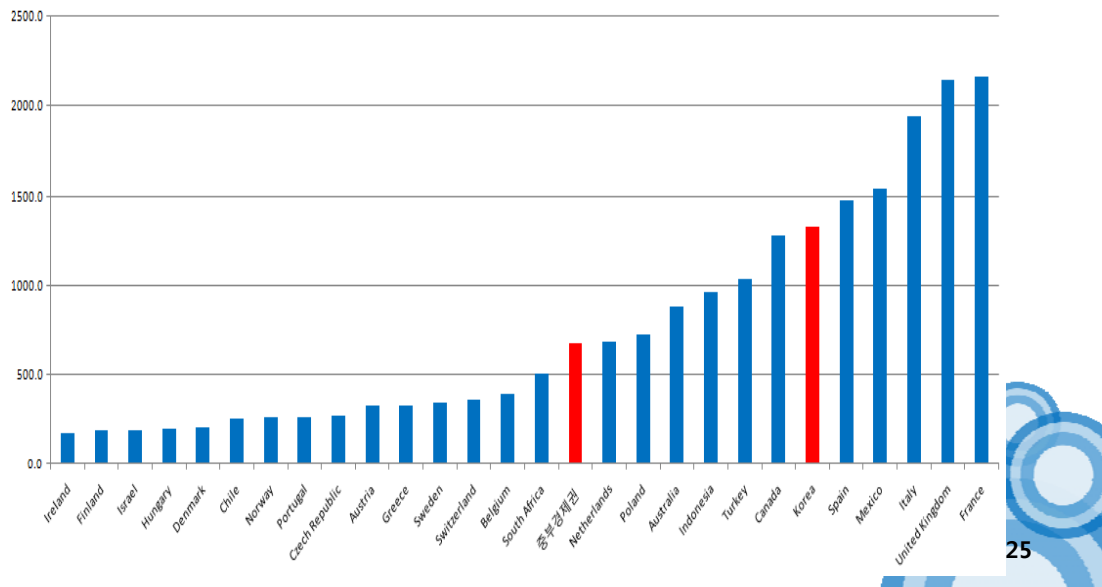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 2010~2040 인구변화 추계

24

▪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글로벌급 광역경제권

- 중부경제권의 인구규모는 캐나다와 비슷하며 세계36위권 규모
- 중부경제권의 총GDP규모는 네덜란드와 유사하며 세계 17위권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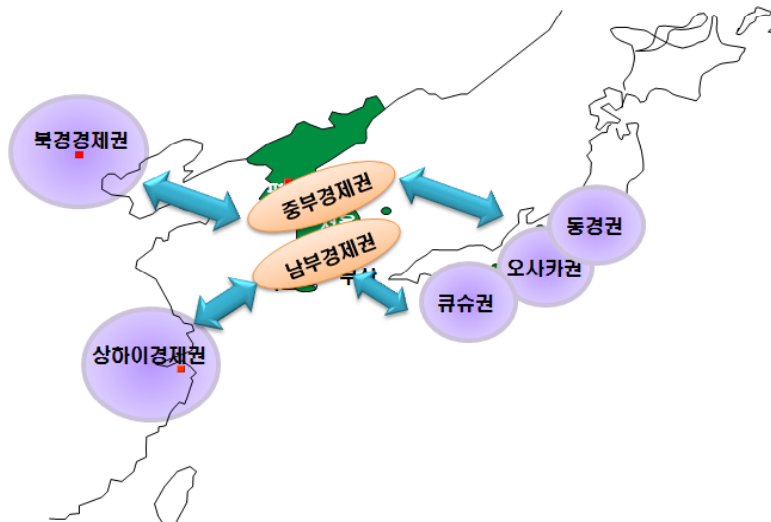
25

▪ 동북아 중심지 기능

- 중부경제권은 세계화 시대에 한반도 동북아 거점 및 글로벌 관문 역할을 담당

* 중부경제권은 중국의 북경경제권, 일본의 동경경제권 등과 경쟁

→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26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지식·창조경제 선도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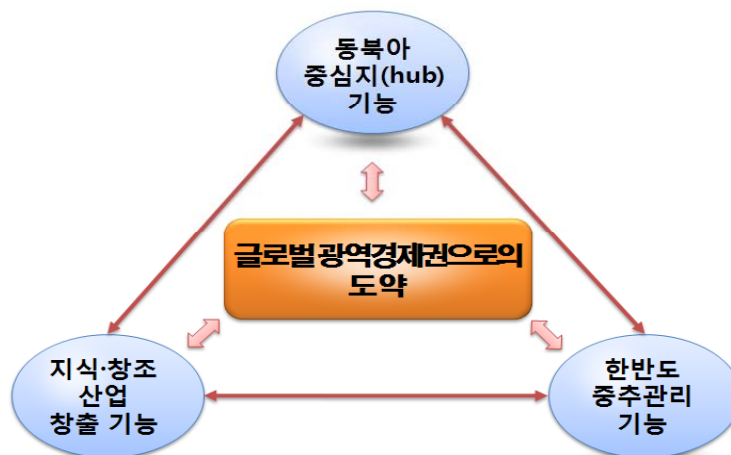
- 세계는 지식·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동 중
 - * 지식·창조경제는 지식에 기반한 창조성이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
 - * 2002년 이후 연평균 14% 고속성장
- 중부경제권은 다양한 지식·창조경제의 기반 및 자원을 갖춘 지역
 - *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수의 70% 이상, 전체 투자액의 75%, 전체 특허의 80% 이상
- 중부경제권이 한국의 창조경제를 주도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출

	산업경제	정보경제	창조경제
경제위기	오일쇼크 (1970~80년대)	IMF외환위기 (199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성장동력	토지, 노동, 자본	지식, 정보	상상력, 창의성
주력산업	중화학공업 (자동차, 조선, 철강)	IT산업 (가전, 반도체, 정보통신)	창조산업 (서비스, 예술, 콘텐츠)
성공신화	한강의 기적	IT강국 코리아	Creative 코리아 (제2의 한강의 기적)

27

▪ 한반도 중추관리 기능

- 한반도의 정치·행정 중심지 기능
- 대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지원 기능 → '북부경제권'의 형성을 지원
- 지역균형개발 지원 기능 → '남부경제권'의 형성을 지원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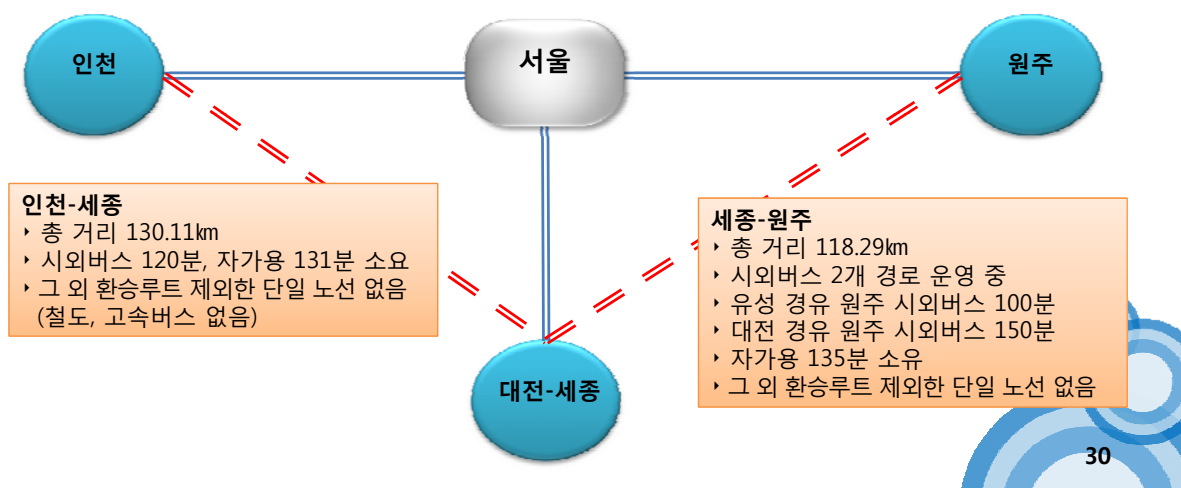
IV. 중부경제권 역할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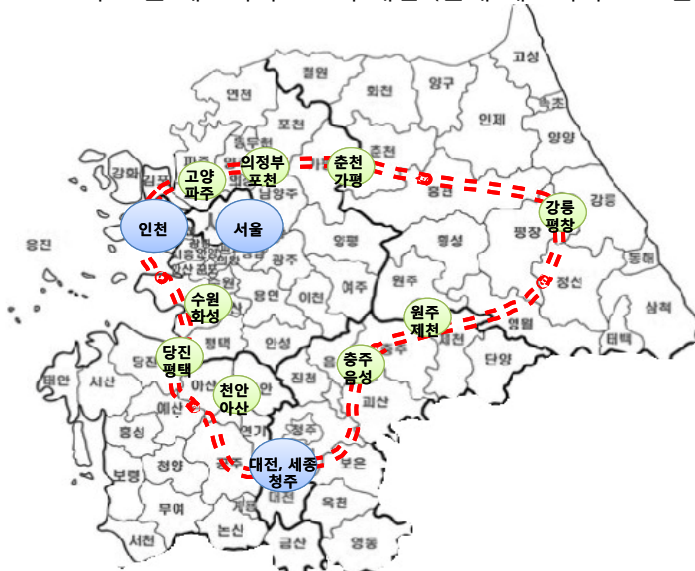
▪ 주요 거점간 연계교통망을 정비하여 반나절 생활권 구축

- 서울권과의 접근성은 우수
 - * 서울-대전, 서울-원주, 서울-인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로 연계
- 대전·세종권과 인천권 및 강원권간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
 - * 신설보다는 기존 교통망의 연계성 강화 및 확충 또는 고속화



· [가칭] '중부권 외곽순환도로' 의 구축

- 중부경제권의 주요 거점들을 연결하는 '중부권 외곽순환도로'의 연계 구축
- * 기존 구간의 활용 및 단절구간 도로망의 정비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구축
- * 중부경제권 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반나절 생활권화
- * 수도권 제3 외곽도로의 개념 (현재 제2 외곽도로 건설 중)



수도권 제1, 제2 외곽순환도로

31

중부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중부경제권 내에는 4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음

- ✓ 기 지정 경제자유구역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황해경제자유구역(YESFEZ)
- ✓ 지정 예정 경제자유구역 → 충북(오송) 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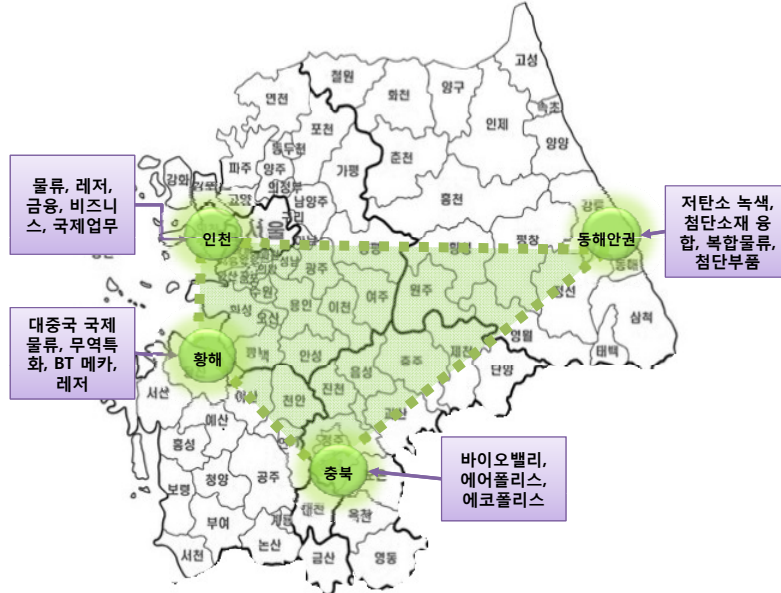


구분	추진기간	면적	사업비	외자유치실적 (목표액)
인천	2003~2020	170km ²	78.0조원	19.3억불(91억불)
황해	2008~2020	16km ²	4.7조원	0.1억불(18억불)
동해안	2012~2023	8.61km ²	1.1조원	-(30억불)
충북	2013~2020	10.77km ²	2.9조원	-(20억불)

32

▪ 동북아중심지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필수적

- ✓ 특히 4개 경제자유구역의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하여 상호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가칭) '중부권 EFZ 트라이앵글' 구축
- ✓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및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여 글로벌 기능 강화



33

▪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을 위한 규제 완화

- ✓ 외국기업의 구성원과 인재가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 ✓ 각종 국제컨벤션을 유치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충
- ✓ 국내기업의 진입규제를 장기적으로 축소 및 폐지

▪ (가칭) '중부권 통합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

- ✓ 기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합하고
- ✓ 새로이 신설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유보



34

지역공항의 기능 분담을 통한 활성화

■ 중부경제권에는 4개의 공항이 운영 중

- 허브공항 → 인천국제공항
- 지역공항 → 김포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공항 별	2004. 11	2006. 11	2012.11*
김포국제공항	2,051,652 (명)	2,379,235 (명)	2,814,981 (명)
청주국제공항	64,100 (명)	84,943 (명)	120,000 (명)
양양국제공항	4,384 (명)	4,394 (명)	32,000 (명)

주: 김포공항은 2011년 11월, 청주공항은 2012년 6월, 양양공항은 2012년 11월자료

35

■ 국제적 경기불황 속에서도 한국은 항공여객 수 4천만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중부권공항들이 특히 선전하고 있음

- 2002년 이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여객 추이는 연평균 7.3% 증가
- 김포공항은 국적 항공사 및 외항사의 항공여객 10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
- 청주공항은 2002년에 비해 250%증가하여 월 이용객수 12만명 기록
- 양양공항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최근 활성화에 성공하여 이용객수 3만명 기록

양양공항 기적의 부활 (조선일보. 2012. 11.1)

3년 전 9개월간 승객 0→올해 3만 명으로
몇 년 전만해도 '유령공항' 오명...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강원도, 파격적 유치전략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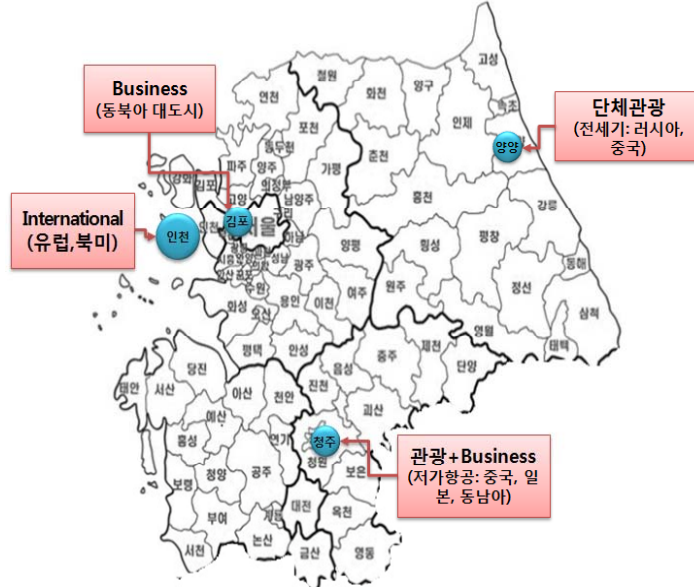
양양국제공항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영국 BBC방송 보도)으로 불렸던 적이 있다. 2008년 11월 2일부터 이듬해 8월 14일까지 9개월여 동안 단 한 편의 비행기도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객은 제로(0)인데 70여명의 공항 직원들만 일하는 풍경을 놓고 사람들은 '유령공항' 같다고 비아냥댔다. 경제성은 도외시한 채 지역정치 논리로 건설한 대표적인 재정낭비 사례로도 꼽혔다.

그러나 2012년 10월 30일, 같은 양양공항에는 입·출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224명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여기저기 중국어 소리로 시끌벅적 해 중국의 한 공항에 온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 공항은 올 10월 현재 국내의 승객 2만 3300여명이 이용했고, 연말까지 총 3만20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6

▪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공항활성화 및 상호연계성 강화

- ✓ 김포공항 → 동북아 대도시들간의 비즈니스 셔틀공항
- ✓ 청주공항 → 중국, 일본,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저가항공 중심공항
- ✓ 양양공항 → 러시아, 중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기 중심공항



37

● 중부권 R&D 산업의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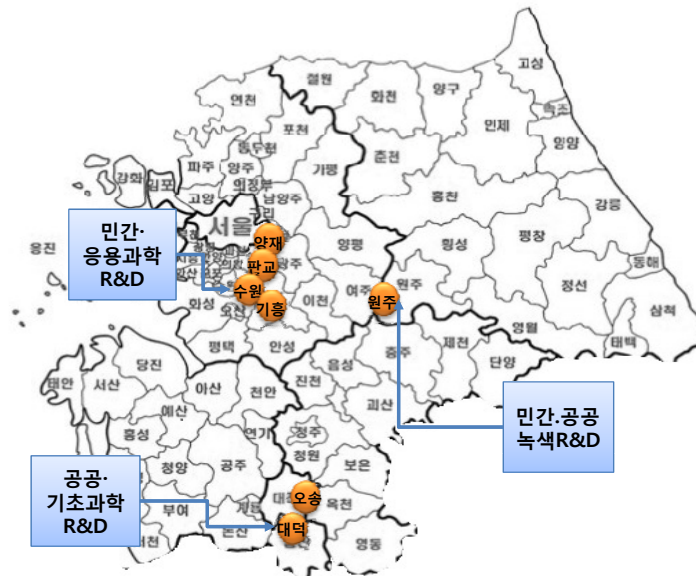
▪ 중부권은 우리나라 R&D산업의 중심지

- 수도권 → 전국 총R&D의 65%를 차지
 - * 기업R&D투자의 72%, 대학R&D 연구의 55% 차지
 - * 다양한 R&D집적지구 존재
 - * 서울: 마곡R&D시티, 상암DMC, 공릉동 서울테크노폴리스, 테헤란밸리, 양재밸리 등
 - *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안양벤처밸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 대전.세종.충청권 → 국가차원의 기초과학 연구중심지
 - *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R&D특구, 오송.오창 과학연구단지 등
 - * 세종시: 국책연구기관 16개 이주
- 강원권 → 녹색 R&D 중심지
 - * 원주권: 의료기기 및 바이오 R&D

38

■ 중부권 광역 R&D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 ✓ 수도권 → 민간주도의 응용과학 R&D에 특화
- ✓ 대전·세종·충청권 → 국가주도의 기초과학 R&D에 특화
- ✓ 강원권 → 민간·공공 협력에 의한 녹색R&D에 특화



39

■ 중부권 차원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계획”을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

- 중부권 소재 대기업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R&D부문의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개발전문기업화 유도
- 연구개발전문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중부권의 기초연구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주도
- 중부권내 중소, 중견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기반기술을 연구개발전문기업과 공동으로 개발, 활용하도록 유도

■ 해외R&D센터의 유치를 위해 R&D적합지로서의 중부권의 이미지 구축 필요

- 경기도의 경우 “Global Inspiration”이라는 슬로건 하에 해외R&D의 국내투자를 독려
- 아일랜드, 인도, 중국 등은 해외R&D센터 유치를 위해 핵심슬로건을 사용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어, 중부권 공통의 브랜드이미지 구축이 필요

40



국제컨벤션산업의 전략적 육성

■ 한국이 국제컨벤션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

-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편리한 입지적 이점으로 인해 국제 컨벤션산업이 빠르게 성장
 - *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
- 국제협회의연합이 발표한 2011년도 세계 국제회의 개최순위
 - * 한국은 469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점유율 4.6%를 기록하며 세계 6위 기록

순위	국가명	2011년	2010년
1	싱가포르	919	725
2	미국	744	936
3	일본	598	741
4	프랑스	557	686
5	벨기에	533	597
6	한국	469	464
7	독일	421	499

출처: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UIA) International Meeting Statistics 2011



■ 중부권이 국제컨벤션을 주도하고 있음

- 2011년의 경우 수도권(서울)은 232건의 국제회의를 개최
 - * 도시별 순위에서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등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
- 향후 대전.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제컨벤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충청권(대전)의 경우 2012년 58건을 개최
 - *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 컨벤션산업(MICE)이 신성장산업으로 주목

- 컨벤션산업의 경제성장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컨벤션센터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지식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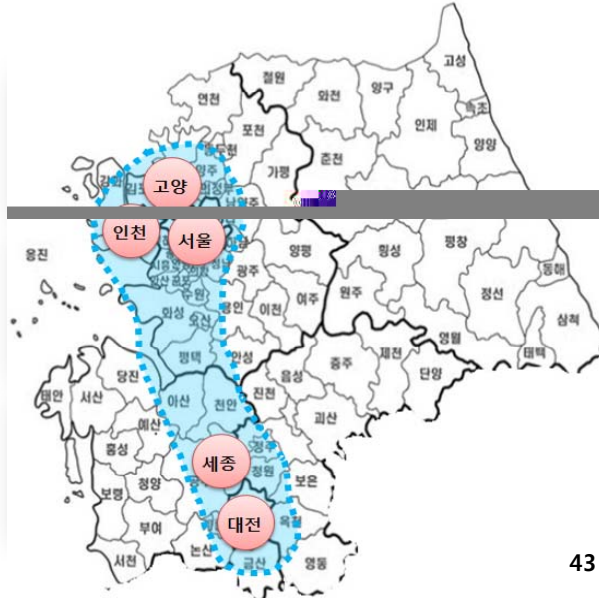
■ 서울-고양-인천-세종-대전을 잇는 (가칭) '중부권컨벤션벨트'를 구축

- 수도권 및 충청권의 연계협력사업으로 중부권 컨벤션벨트를 집중 육성

* KINTEX, COEX, DCC(대전컨벤션센터), 송도컨벤시아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비즈니스 호텔의 확보, 국제회의기획업체의 육성, 인증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

■ 국내 전시·컨벤션 센터 현황



43

● 한방·양방 통합 의료관광 벨트 조성

■ 중부권에서 의료관광이 빠르게 성장

-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총 344,407명에 달함

* 한국의 의료기술 발달 및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도 향상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

* 외국인 환자는 2010년 224,260명에 비해 53.6% 증가

* 전체 의료관광객의 약 90%가 중부권에 집중

- 지금까지는 성형·피부관리를 중심으로 한 양방 의료관광이 다수

* 서울 강남지역이 전체 의료관광객의 약 64% 차지

* 그러나 최근 한방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

* 따라서 한방·양방이 연계된 의료관광을 추진할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강남구의 의료특구 추진

44

■ 의료관광은 일반관광에 비해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음

- 의료관광에 1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 생산유발효과 17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37억원, 136명의 취업유발효과 발생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
유발금액	176억원	80.4억원	237명	136명

출처: 서정교(2011)

- 1인당 평균진료비는 149만원, 입원환자 진료비는 662만원으로 추산

- 이러한 이유로 싱가폴은 의료관광을 최우선 국가목표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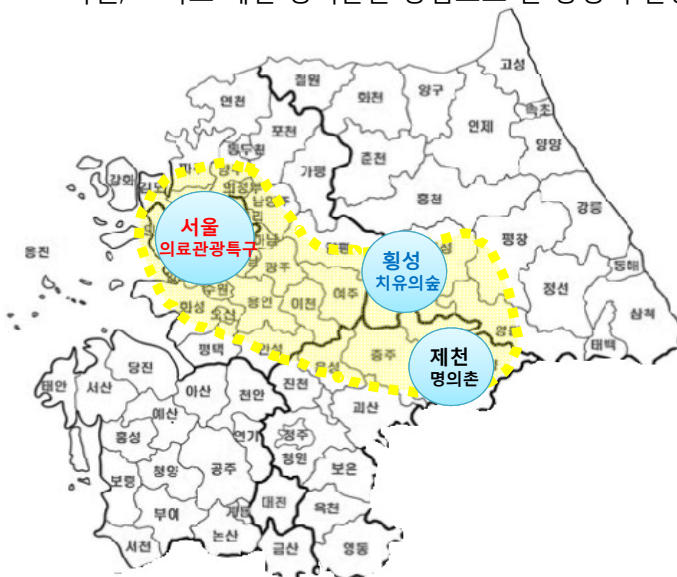


45

■ 중부경제권 통합의료관광 벨트 조성

-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이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의료관광을 연계하여 한국형 Healing 프로그램을 개발 → '통합의료관광벨트' 조성

- 서울의 성형.피부를 중심으로 한 현대의료시설, 강원도의 치유의 숲 등 휴양형 의료관광 자원, 그리고 제천 명의촌을 중심으로 한 충청의 한방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한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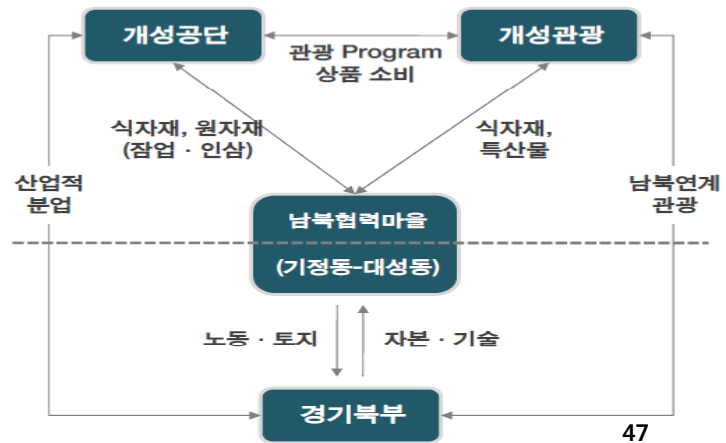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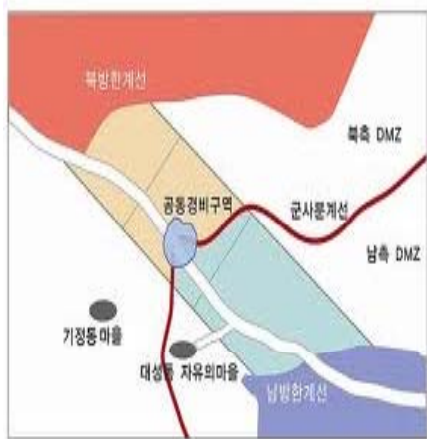


46

한반도 중추관리기능 강화: 남북협력사업 추진

남북대립의 선전마을 (기정동-대성동) 을 남북협력의 상징공간으로

- 개성공단·개성관광 배후지 농업·경공업 협력사업
- 남북연계 관광프로그램의 거점지역
- 남북문화 비교체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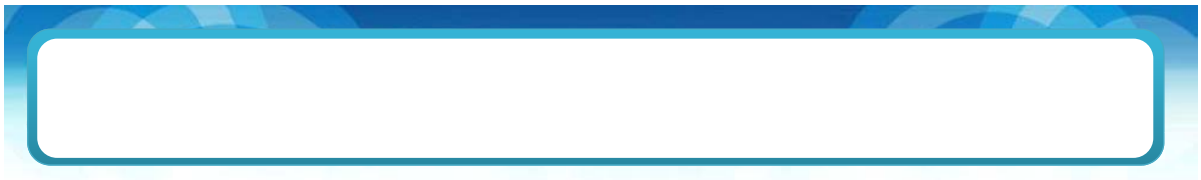


DMZ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 DMZ는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그 자체가 무궁무진하고 풍부한 교육 재료
 - * 임진강과 한탄강을 따라 나타나는 추가령지구대는 한반도의 지질경관 학습
 - * 완전히 고립돼 보존된 곳으로 세계사에 유례가 없으며, 과학적 측면에서 큰 가치
- 자연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 * 예: 경기도 연천-강원도 철원-북한 평강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



V. 맺는 말



▪ 작동가능한 광역경제권의 형성이 선진국 국토전략의 핵심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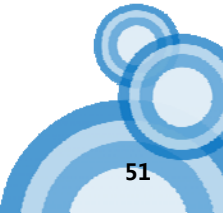
(예) 미국 → 오바마 대통령의 '대도시권국가(Metro Nation)' 전략

- 침체의 늪에 빠진 미국경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오바마 新행정부는 대도시권 국가론(Metro Nation)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 * 백악관에 도시정책실(Office of Urban Policy)을 설치
 - * 광역대도시권별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제시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구
- 오바마 新행정부의 대도시권정책(Metro Nation Policy)의 핵심
 - * 국가전략의 핵심인 혁신, 인적자본, 기반시설, 정주환경 등을 대도시권 단위로 계획
 - * 이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대도시권으로 이양

▪ 선진국의 이러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부경제권을 매개로 한 '한반도경제권'을 형성하는 장기 전략이 필수적



- 
- 중부경제권의 구축은 동남권-호남권을 결합한 이른바 '남부경제권'의 형성을 자극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 남한이 크게 2개의 글로벌 광역경제권 (중부경제권 및 남부경제권)으로 재편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 전체가 '북부경제권'이라 명명될 수 있는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형성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특화된 3개의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되어 상호시너지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강력한 '한반도경제권'을 구축하게 됨
 - * 인구 8,000만 명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경제권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높은 글로벌경쟁력을 지닌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주요한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음



51



THANK YOU

발표③ : 남부경제권 구축방향

이정식 교수 (前 국토연구원장)

남부경제권 구축방향

2013. 1. 30

이 정 식

(前 국토연구원장 / 前 안양대학교 교수)



목 차

I. 구상의 개요

II.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

III. 남부경제권의 도시체계 분석

IV. 남부경제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V. 실천방안 및 정책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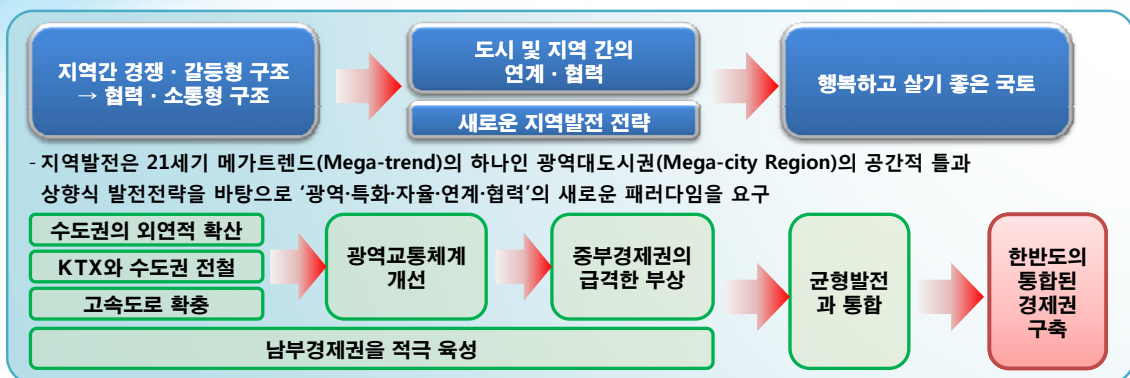


I. 구상의 개요



I. 구상의 개요 >>>

1 구상의 배경



2 구상의 내용

- 기존의 물적 계획과 종합계획의 틀을 벗어나 전략계획 차원의 발전전략을 제시
- 공간적 범위 :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포함
- 내용적 범위 : 남부경제권의 다핵도시체계를 토대로 대·중·소 도시권의 주요 기능과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

II.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



II.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



1 광역대도시권의 도래

세계 여러 나라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 또는 거대지역(super regions)

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의 '지역국가(region states)' Petrella의 '도시지역(city regions)',
Florida 교수의 'Mega-region' 등이 대표적 사례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Mega-city Region 개념의
광역도시권 발전전략을 국토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지역생활권, 지역경제권, 광역권, 광역경제권 등의 계획
지역(planning region) 위주의 공간구분 대신,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 위주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권으로 국토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전국토의 도시화 진행

도시인구의 분포

- 市級 도시인구(인구 10만 명) 비율 : 2000년 87% → 2010년 90%
(2030년 경에는 전 국토가 하나의 거대도시권(One Metro-nation)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
- 수도권 인구비중 : 2000년 46.3% → 2010년 49.1%
- 인구 30만 명 이상인 도시의 총인구 : 2000년 73% → 2010년 76%

도시 규모별 시 인구(명)	2000년			2005년			2010년		
	수	인구	비율 (%)	수	인구	비율 (%)	수	인구	비율 (%)
10~30만	39	6,679,797	14	41	7,465,090	16	36	6,957,504	14
30~50만	13	4,559,545	10	12	4,603,299	10	11	4,306,560	9
50~100만	10	6,766,410	15	10	6,914,030	15	11	7,828,304	17
100만이상	7	22,249,250	48	8	23,293,442	49	9	24,508,286	50
계	69	40,255,002	87	71	42,275,861	90	67	43,600,654	90
전국인구	46,136,101			47,278,951			48,580,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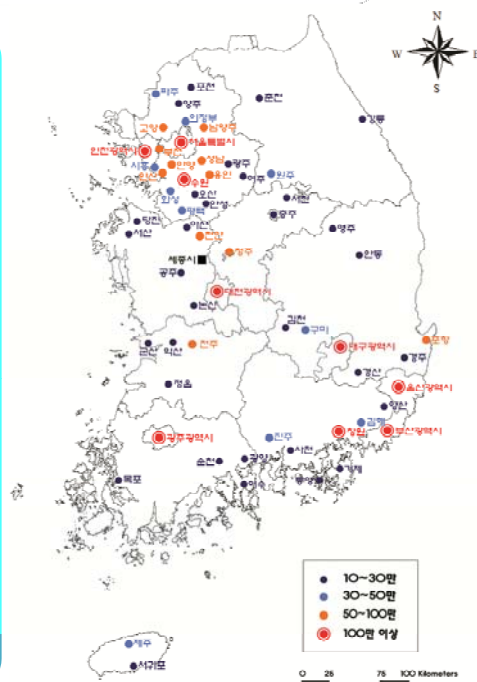
인구규모별 도시 수 및 비율 (자료: 통계청)

7

2 전국토의 도시화 진행

도시 공간구조의 특성

- 지난 10년간 중소도시보다 인구 50만명 이상
중규모 도시의 성장이 더욱 빠름
- 강원도와 충남 서부, 전북의 동남부, 전남의
중남부, 경북의 중북부, 경남의 서북부 지역
등에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도시가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음



인구규모별 도시 분포(2010)

8

3 수도권 외연적 확산과 중부경제권의 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1994)』에 따라 수도권의 산업입지, 대학, 공공 청사, 대규모 관광단지 등에 대한 차등규제 → 충청권 등으로 개발이 확산
- 수도권 전철의 연장 : 서울~천안·아산은 직접적 생활권
 - KTX 개통 : 서울~대전 반나절 생활권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서울,경기~원주·평창 등의 접근성 제고(서울~강릉·속초 3시간)

- 수도권과 대전·충청·강원 등이 단일 생활권·단일 경제권으로 부상
- 서울을 중심으로 기업과 일자리의 지속적인 확산, 고속교통 수단의 개통과 간선교통망의 개선
 - 서울·인천·대전·경기·강원·충청 등을 중부경제권으로 육성할 필요성 대두
 - 중부경제권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남부경제권의 육성이 향후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1)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인구와 경제 연왕(2010)

- 남부경제권의 면적은 53,086km²(전국의 53.1%), 인구는 17,698천명(전국의 36.4%)
- 남부경제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중부경제권의 59.5%에 불과
 - 수출 실적은 남부경제권이 중부경제권보다 약간 높음(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수출 주도형 중공업 분포)

경제권	시·도	면적(km ²)	인구(천명)	GRDP(10억원)	제조업종사자(천명)	서비스업종사자(천명)
중부 경제권	서울	605	9,794	271,649	273	2,637
	인천	1,029	2,663	56,857	219	354
	대전	540	1,502	26,413	51	274
	경기	10,167	11,379	232,429	1,036	1,709
	강원	16,693	1,472	28,829	43	267
	충북	7,433	1,512	36,233	144	231
	충남	8,630	2,028	76,354	217	295
소 계		45,097(45.1%)	30,350 (62.5%)	728,764 (62.1%)	1,983 (58.0%)	5,767 (66.6%)
남부 경제권	부산	767	3,145	59,531	194	582
	대구	884	2,446	35,632	155	377
	광주	501	1,476	25,140	75	252
	울산	1,059	1,083	59,160	144	173
	전북	8,067	1,777	34,643	99	278
	전남	12,247	1,741	58,750	93	262
	경북	19,028	2,600	78,314	273	384
	경남	10,533	3,160	82,341	390	471
소 계		53,086(53.1%)	17,698 (36.4%)	433,511 (37.0%)	1,427 (41.7%)	2,779 (32.1%)
제주		1,849 (1.8%)	532 (1.1%)	10,469 (0.9%)	9 (0.3%)	115 (1.3%)
합계		100,033(100.0%)	48,580 (100.0%)	1,172,742 (100.0%)	3,418 (100.0%)	8,662 (100.0%)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사회·경제 현황(2010, 통계청, 국토해양부)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2)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격차 심화

- 중부경제권은 남부경제권에 비해 인구, 지역 내 총생산(GRDP), 서비스업 종사자수 등의 분야에서 집중현상이 지속 (2005~2010년 기준)
- 이러한 격차는 생산자 서비스산업(Producer's Services)의 증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입지 등 경제적 중추기능 뿐만 아니라, 인구와 고급 일자리 등의 쏠림 현상이 향후에도 중부 경제권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구분	인구 비중		GRDP 비중		제조업 종사자 비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년도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중부권	61.4	62.5	61.6	62.1	59.1	58.0	65.7	66.6
남부권	37.5	36.4	37.4	37.0	40.6	41.7	33.0	32.1
제주	1.1	1.1	1.0	0.9	0.3	0.3	1.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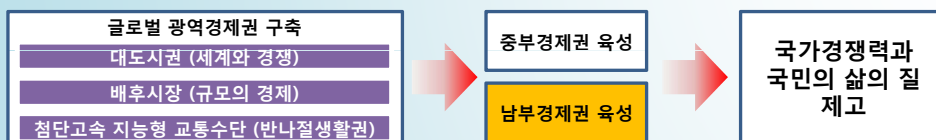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사회·경제지표 변화(자료 : 통계청,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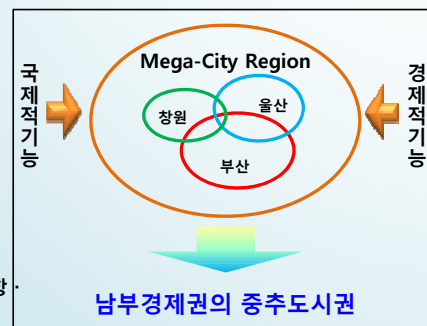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3)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대두

- 중부경제권과 함께 남부경제권을 적극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의 구축이 시급



-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Mega-city Region에 해당하는 대도시권에 국제적·경제적 기능과 도시 기능을 강화 → 남부경제권의 중추도시권으로 육성
 - 대·중·소 도시권 체계를 구축 → 도시 및 지역 간의 상생 발전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의 성장동력을 확산시켜 남부경제권의 통합 기반을 구축(대구·구미, 광주·나주, 전주·익산·군산, 포항·경주, 광양만, 진주·사천 등 다핵도시권으로 확산)



12

Ⅲ. 남부경제권의 도시체계 분석



Ⅲ. 남부경제권의 도시체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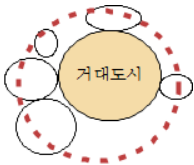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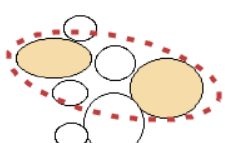


1 도시권 구축의 필요성

1) 도시권의 개념 및 유형

 도시권은 중심도시 및 중심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배후지역으로서 통근권 및 경제권, 일상생활권 등을 토대로 한 일체화된 기능지역을 의미

- 학자나 지역정책에 따라 city-region, super-region, mega-region, metropolitan-area 등으로 불림
- 최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의 육성 차원에서 Mega-city Region(MCR)이 자주 인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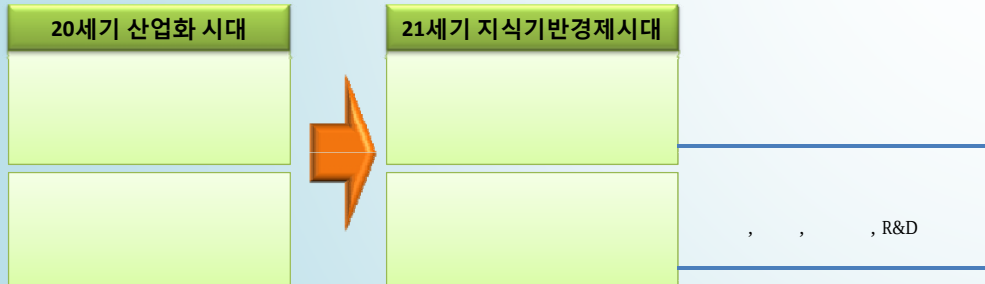
유형1	유형2	유형3
하나의 거대도시가 주변의 배후지역을 경제·정치적으로 통합하여 글로벌 도시권으로 발전한 형태	연담도시 형태의 거대도시 지역으로서 인접한 도시의 배후지역이 공간적으로 중첩 또는 수렴되는 형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인접한 중심도시들이 상호 협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 혹은 제휴하는 형태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네덜란드 Randstad 지역	- 외레순(Øresund)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덴마크 코펜하겐 - 스웨덴 말뫼(Malmö) 초광역권의 초국적 연계형태



1 도시권 구축의 필요성

2) 도시권의 중요성 대두

21세기에는 규모 및 네트워크 경제(Economy of Scale & Network)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개별 도시보다는 도시권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임



이 구상에서는 남부경제권의 다핵도시체계 분석을 토대로 주요 도시권의 기능과 발전 전략을 제시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1) 도시권 설정 사례

도시권의 설정 사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11개의 ‘광역도시권’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권개발계획’에서 10개의 ‘광역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5개의 ‘대도시권’

기존의 도시권 권역설정의 문제점

-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기 보다는 정책적 요인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통근·통학, 업무통행, 여가, 쇼핑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함

2) 도시권 설정지표 검토

도시간의 연계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통근·통학률을 중심으로 남부경제권의 도시 체계를 분석

- 통근·통학 관련 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10% 표본조사자료(통근·통학)를 이용
-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는 모도시를 기준으로 주변지역과의 상호 통근·통학률이 5% 이상인 권역을 고려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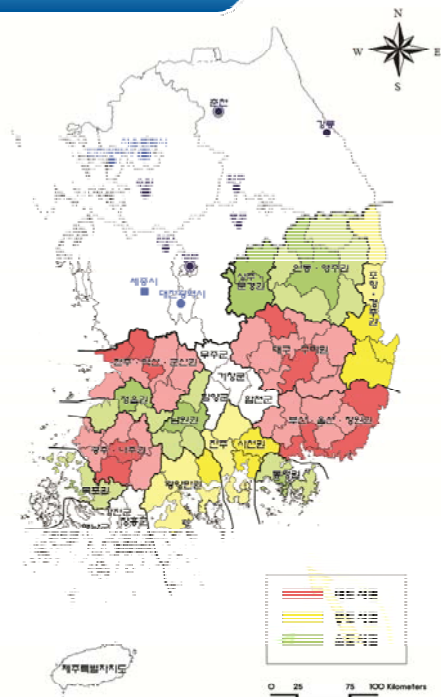
3) 대·중·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대도시권)

대도시권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중심도시 또는 연담도시를 대상으로 설정

- 부산·울산·창원, 대구·구미, 광주·나주, 전주·익산·군산 등 4개
- 주요 기능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거점도시권'의 역할과 남부경제권의 중추도시 기능을 수행

도시권	중심도시	배후지역	인구 (천명)	면적(km)
대도시권	부산울산창원	김해 양산 밀양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6,543	5,760
	대구구미	경산 김천 영천 청도군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3,579	6,610
	광주나주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1,776	3,746
	전주익산군산	김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1,469	4,362
	소계		13,367	20,478
총계			17,698	53,086

남부경제권의 대도시권별 인구(2010)



남부경제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17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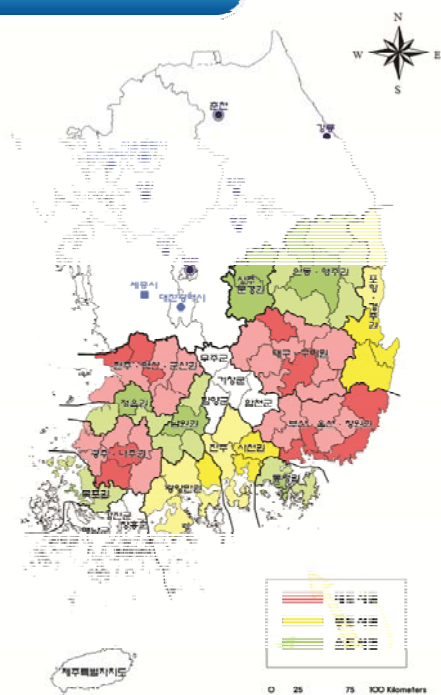
3) 대·중·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중도시권)

중도시권은 인구 30~100만 명인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설정

- 포항·경주, 광양만, 진주·사천 등 3개
- 주요 기능은 '성장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되 주변의 대도시권과 연계하여 남부경제권의 경제성장을 견인

도시권	중심도시	배후지역	인구 (천명)	면적(km ²)
중도시권	포항·경주	영덕군, 울진군	852	4,184
	광양만	여수, 순천, 광양, 보성군, 고흥군	771	3,316
	진주·사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564	2,939
	소계		2,187	10,439
총계			17,698	53,086

남부경제권의 중도시권별 인구(2010)



남부경제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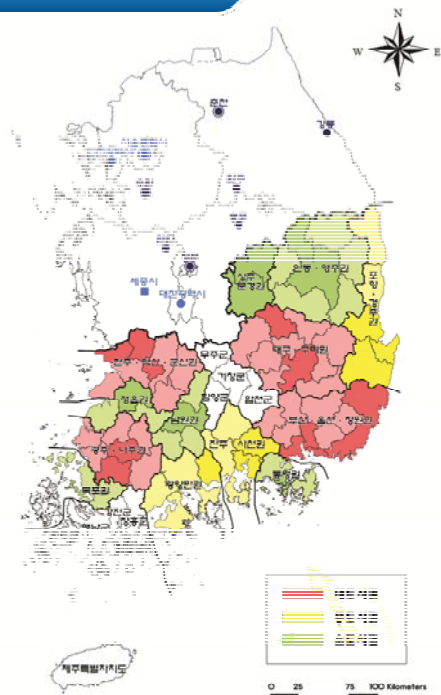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3) 대·중·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소도시권)

- 소도시권**은 인구 10만~30만 명인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설정
 - 안동, 상주, 통영, 정읍, 남원, 목포 등 6개
 - 주요 기능은 성장거점의 역할 및 '자립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여 자립적 발전과 연계·협력발전을 도모
- 소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규모 10만 명 이하의 소도읍
 - 9개는 별도로 육성(무주, 거창, 함천, 함양, 해남, 강진, 장흥, 진도, 완도 등)
 - 각 지역의 향토자원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 확대

도시권	중심도시	배후지역	인구(천명)	면적(km)
소도시권	안동·영주	의성군, 청송군, 예천군, 영양군, 봉화군	441	6,899
	통영	거제, 고성군	412	1,158
	목포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410	1,765
	정읍	고창군, 순창군	189	1,796
	상주·문경		167	2,167
	남원	장수군, 구례군, 곡성군	149	2,277
	소계		1,768	16,062
소도읍	거창, 함천, 함양, 무주, 해남, 강진, 장흥, 진도, 완도		376	6,107
	소계		376	6,107
총계			17,698	53,086

남부경제권의 소도시권 및 소도읍 도시권별 인구(2010)



남부경제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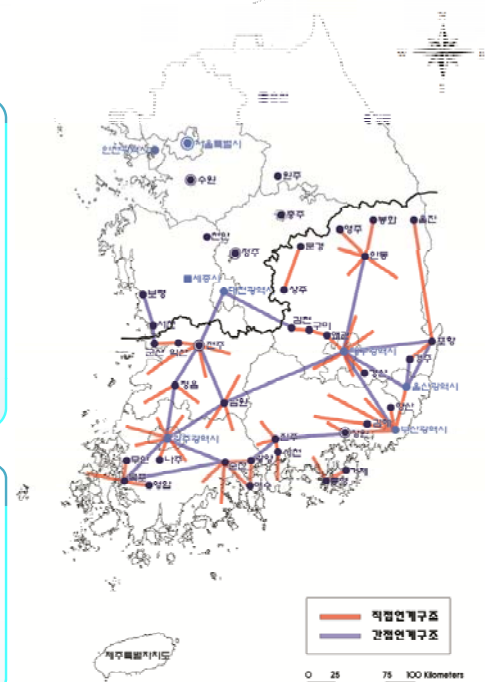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4) 다핵도시의 연계 체계

- 도시 간 직접 및 간접 연계구조**
 - 도시권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와의 상호 통근·통학률이 5% 이상인 권역의 도시 간 연계는 직접적인 동일생활권인 동시에 동일경제권
 - 상호 통근·통학률이 5% 이상인 권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도시 간 여객 및 화물통행량 연계 정도와 산업연계 등을 고려하여 도시 간의 간접적 연계 정도를 파악

- 도시 및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 연계·협력사업은 도시 간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진 대·중·소도시 권 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간접적인 연계성을 가진 타 도시권과의 협력사업도 2차적으로 고려



남부경제권의 다핵도시 연계체계

20

IV. 남부경제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IV. 남부경제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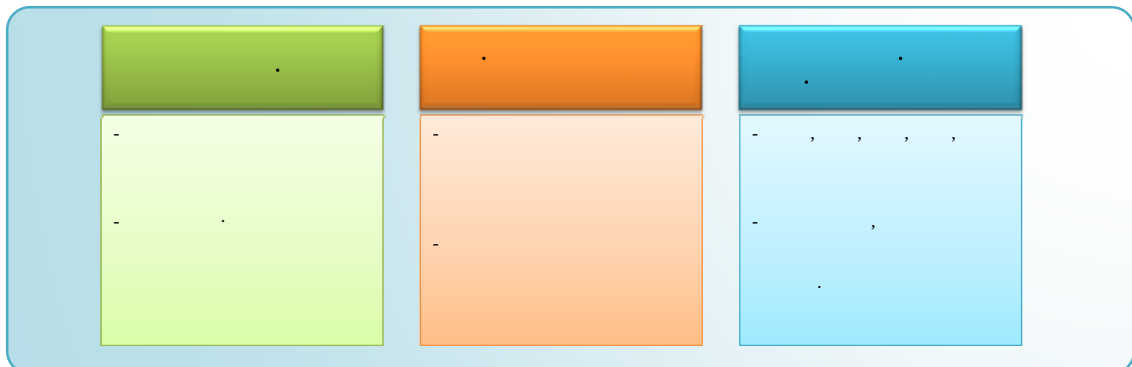
1 남부경제권 발전의 비전과 목표

1) 비전

동북아 및 한반도의 연계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경제권의 중추 거점

- 한반도 남부의 잠재력과 내부역량을 토대로 경제체력을 강화하여 환동해 및 환황해경제권 등 동북아의 국지경제권과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경제권의 창출

2) 기본목표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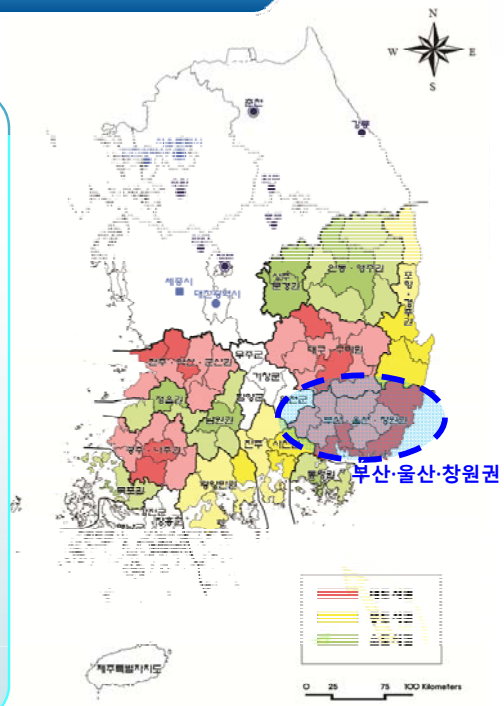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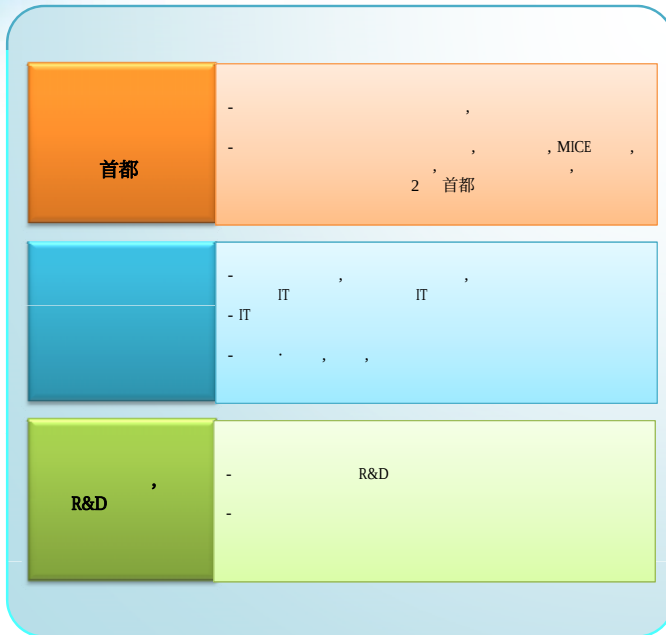




2 대도시권 발전전략1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

1)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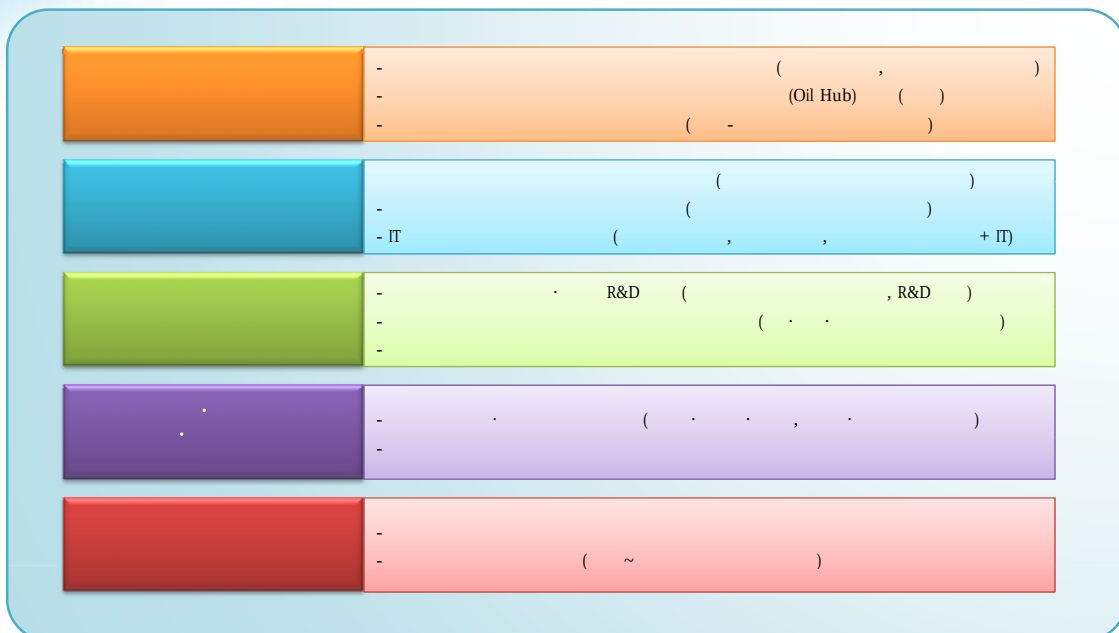
23



2 대도시권 발전전략1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

2) 추진전략



24

대구·구미 대도시권의 위치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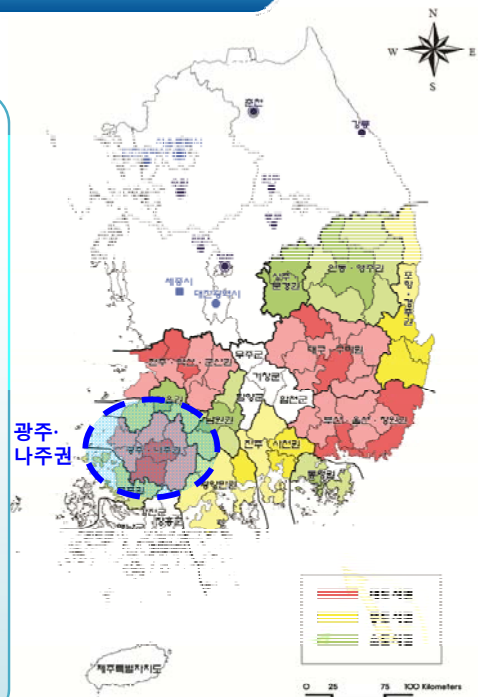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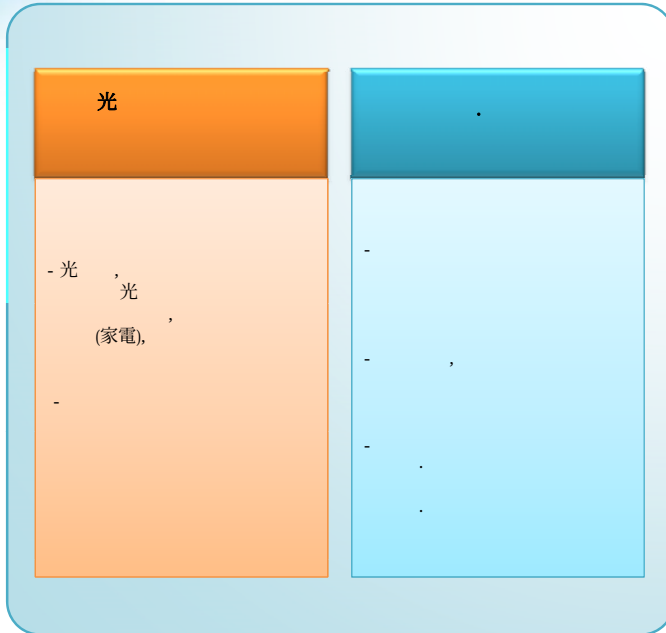
26



2 대도시권 발전전략3

(광주·나주 대도시권)

1)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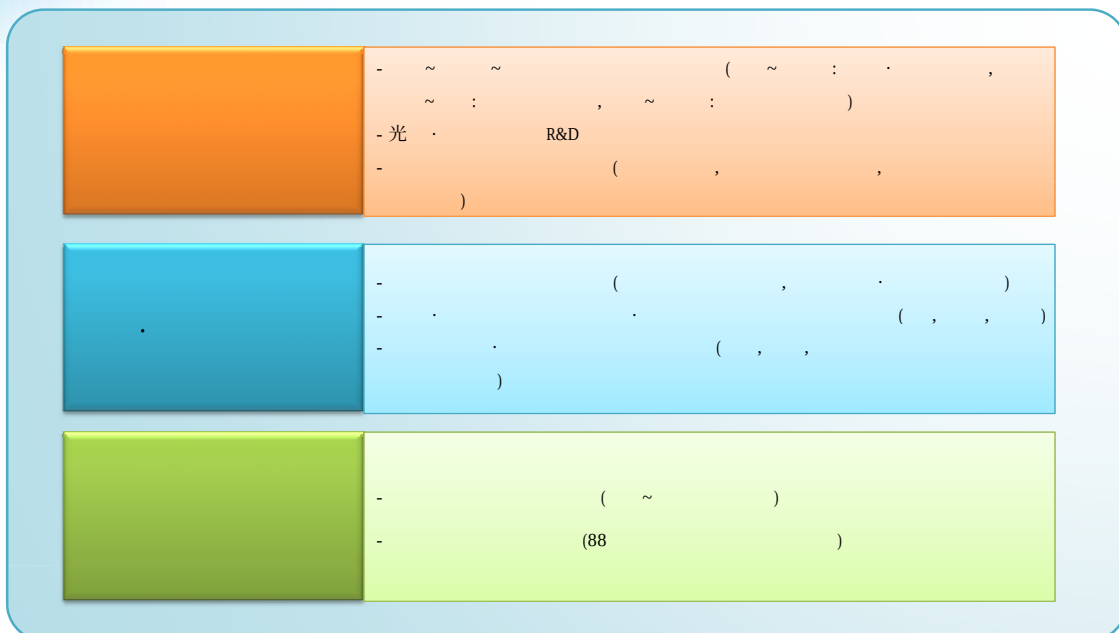
광주·나주 대도시권의 위치



2 대도시권 발전전략3

(광주·나주 대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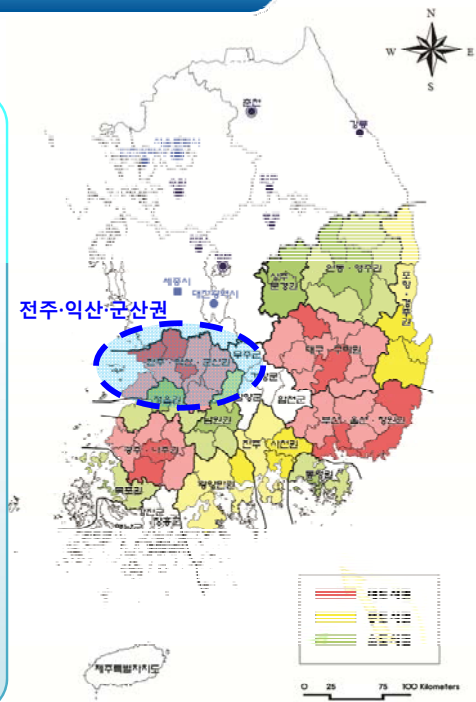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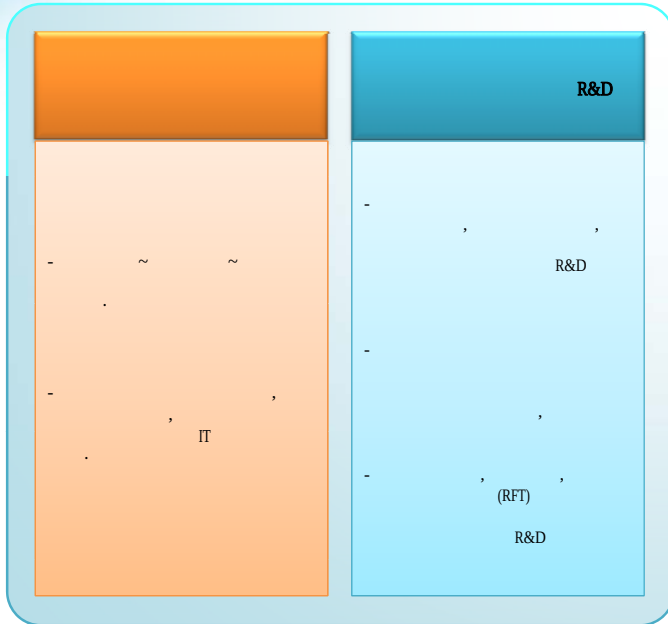
2) 추진전략



2 대도시권 발전전략4

(전주·익산·군산 대도시권)

1)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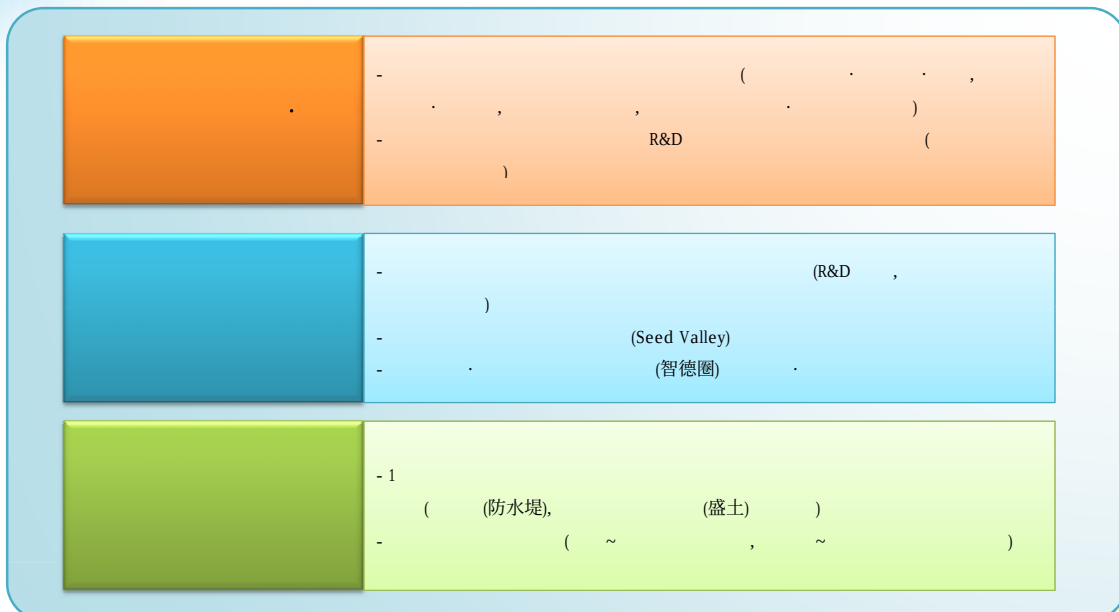
전주·익산·군산 대도시권의 위치

29

2 대도시권 발전전략4

(전주·익산·군산 대도시권)

2)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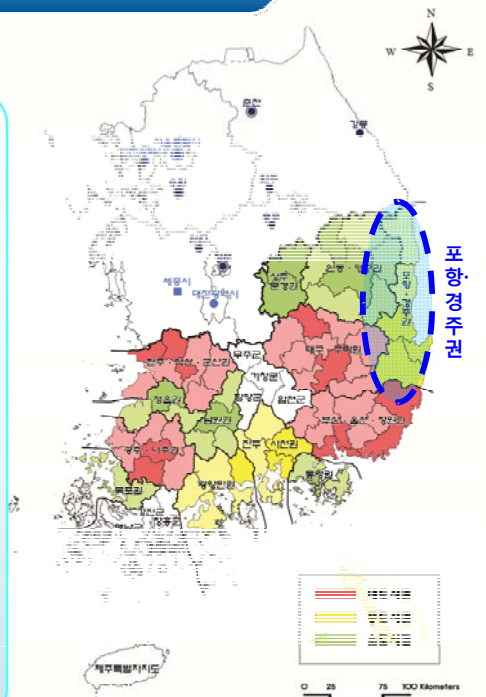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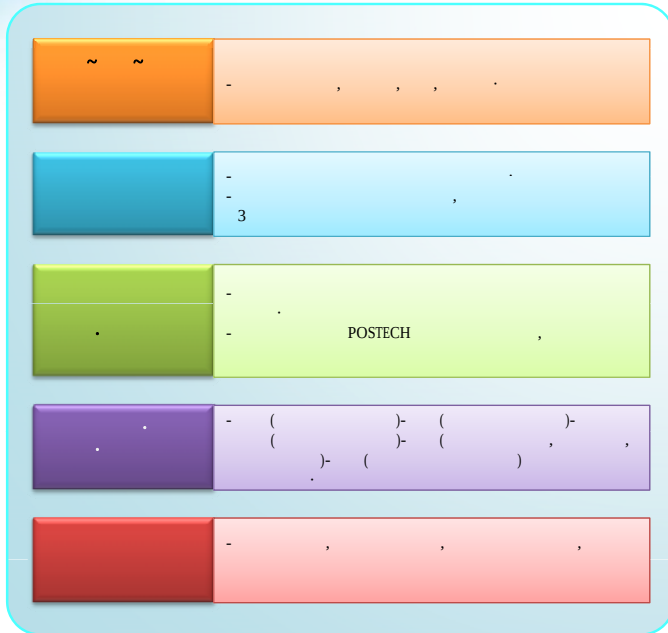
30



3 중도시권 발전전략1

(포항·경주 중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포항·경주 중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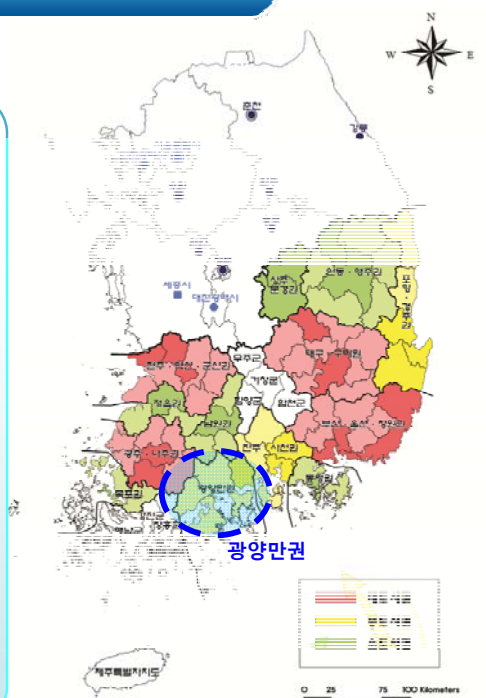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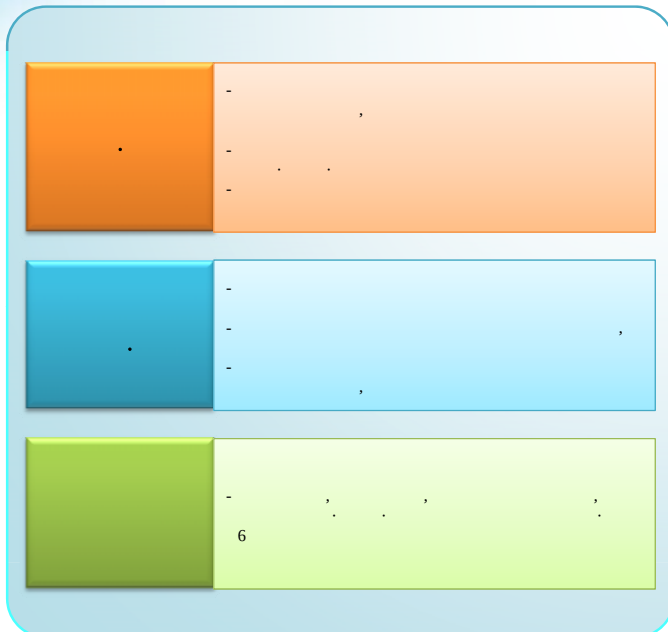
31



3 중도시권 발전전략2

(광양만 중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광양만 중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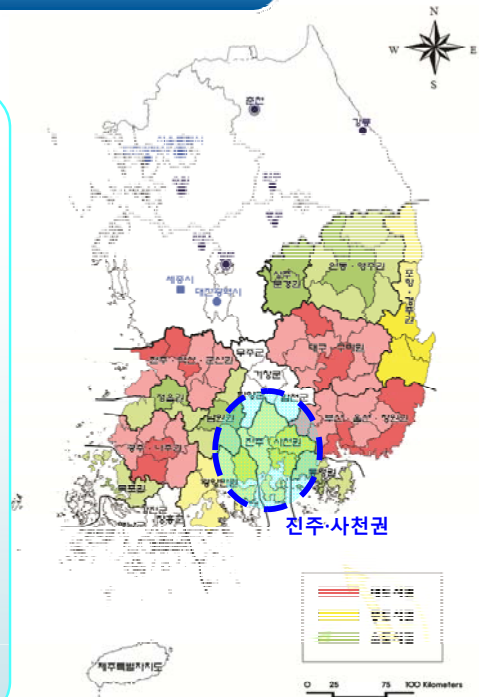
32

3 중도시권 발전전략3

(진주·사천 중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 ,
	()
	()
	()



진주·사천 중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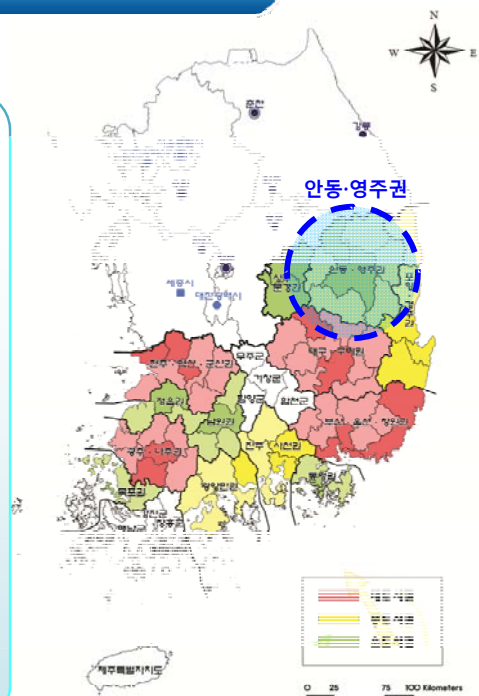
33

4 소도시권 발전전략1

(안동·영주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10) , ,



안동·영주 소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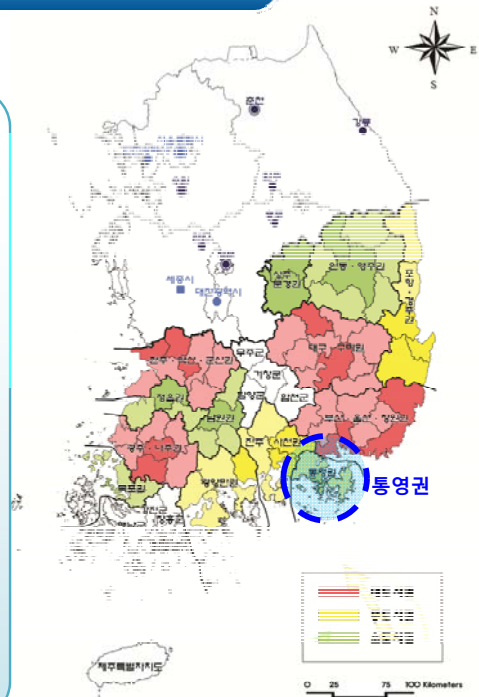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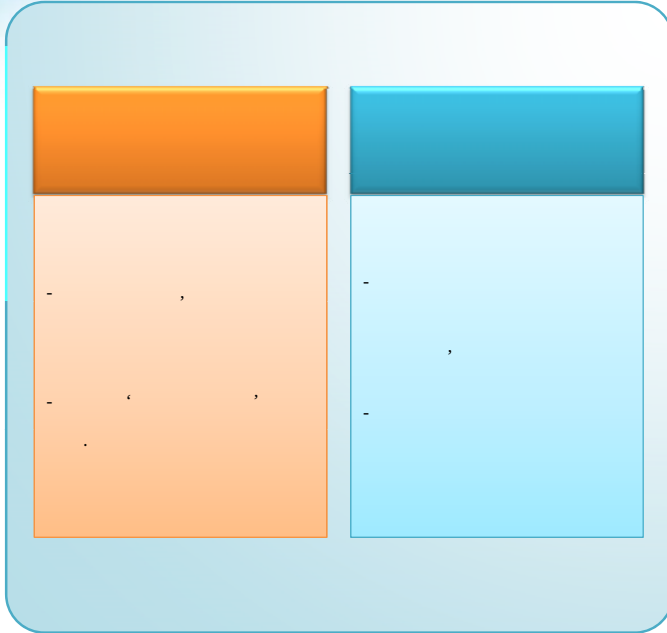
34



4 소도시권 발전전략2

(통영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통영 소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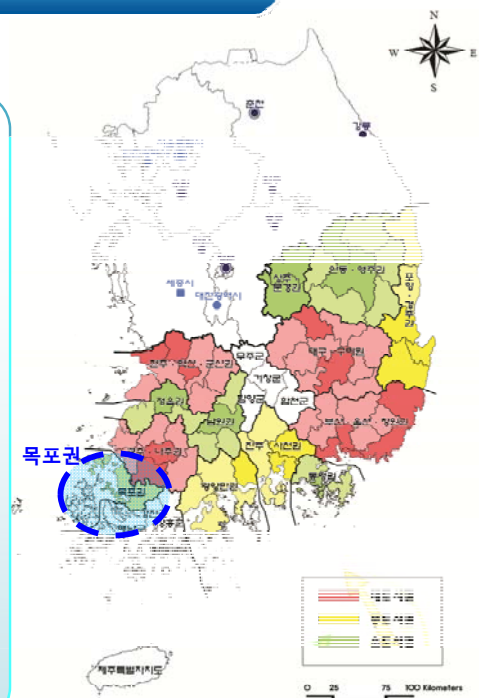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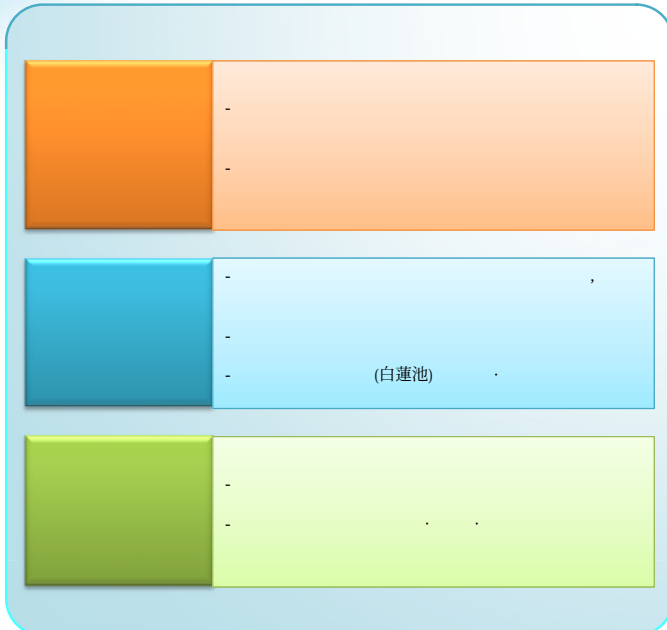
35



4 소도시권 발전전략3

(목포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목포 소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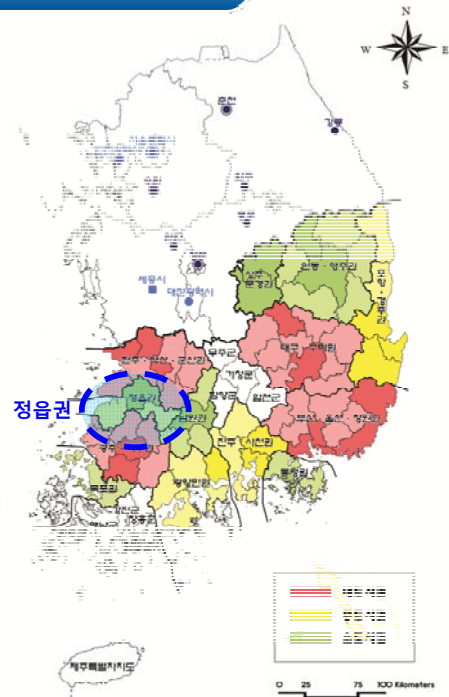
36



4 소도시권 발전전략4

(정읍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정읍 소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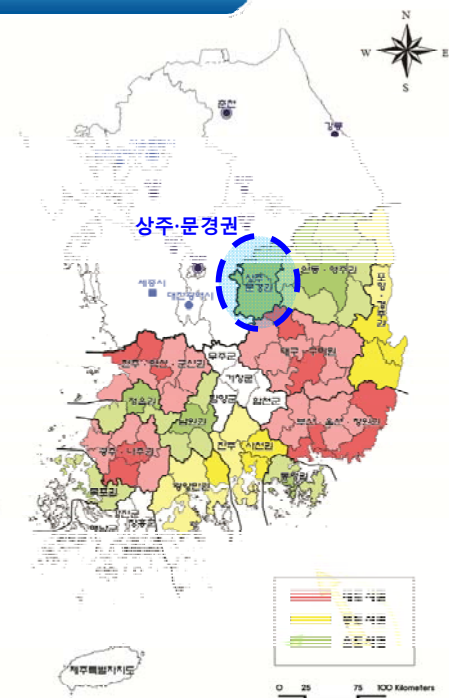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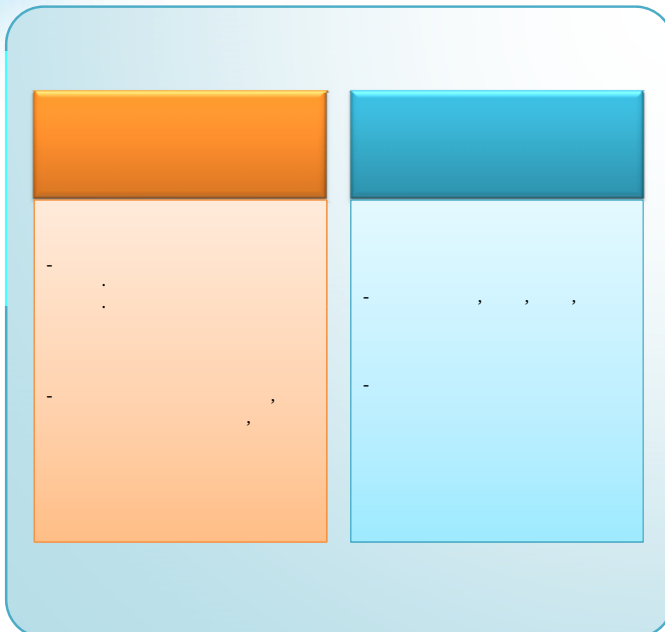
37



4 소도시권 발전전략5

(상주·문경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상주·문경 소도시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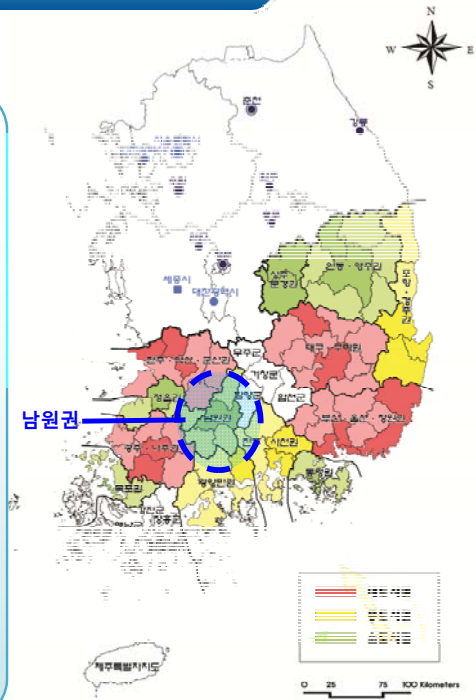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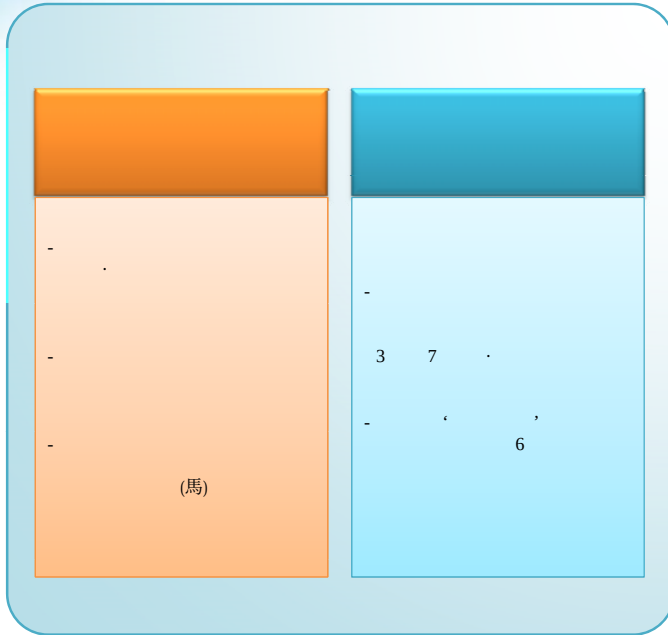
38



4 소도시권 발전전략6

(남원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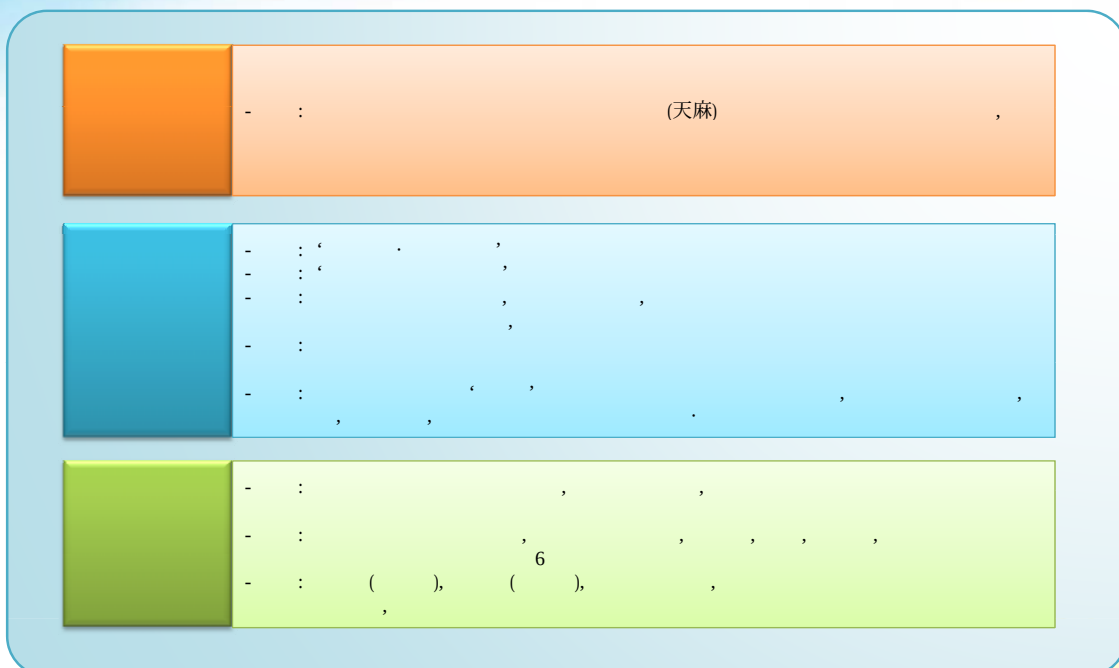


남원 소도시권의 위치

39



5 소도읍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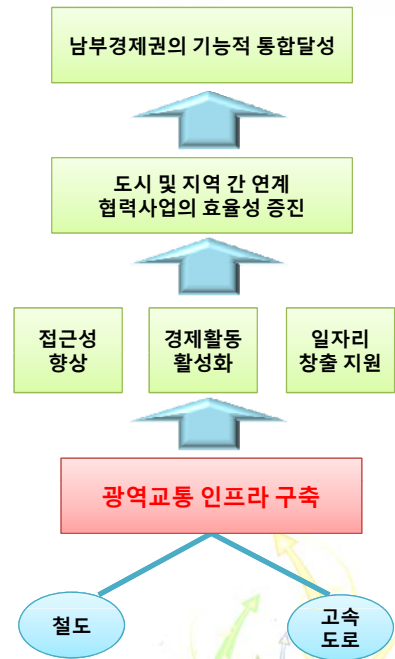
40

6 남부경제권의 통합전략

1) 광역교통 인프라의 연계 구축

- ▶ 남부경제권 내의 도시 및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적 통합을 위해서는 주요 도시 및 경제활동거점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의 우선적인 구축을 추진**
- 광주~남원~함양~고령~대구 간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 : 광주 · 나주, 대구 · 구미 및 전주 · 익산 · 군산(남원 경유) 대도시권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기능적 연계 및 통합을 도모
 - 경전선 철도(삼랑진~진주~순천~보성~광주 송정) 구간 중 순천~보성~화순~광주 송정 구간 : 복선 전철화를 조기에 완공하여 남부지역 도시권 간의 연계 통합을 촉진

- ▶ 도시권 내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
- 부산외곽순환도로 : 조기에 완공하여 부산과 주변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 김천~구미~대구~경산~청도~밀양을 연결하는 광역통근 철도망 : 지역 경제 활동의 원활화를 지원
 - 새만금 신항~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 1단계 사업을 촉진 시킴으로써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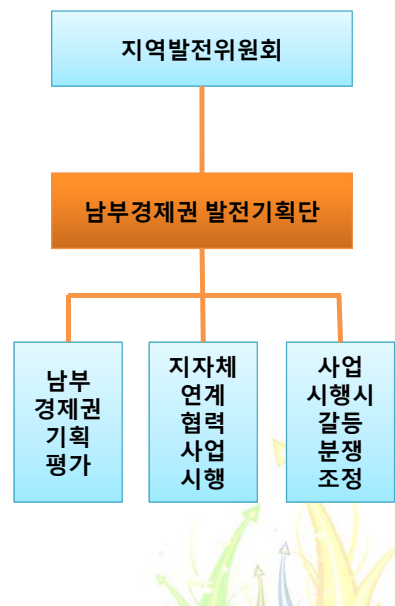


6 남부경제권의 통합전략

2) 광역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

- ▶ ‘남부경제권 교통정책본부’ 설립**
- 남부경제권 내의 연계 및 통합을 촉진시키고, 광역교통 인프라의 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교통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설립이 필요

- ▶ ‘남부경제권 발전기획단’ 설립**
- 남부경제권의 통합을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관련 지자체 간의 연계 ·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며,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추진 기구로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기구 설립이 필요
 - 이와 별도로 프랑스의 DIACT(과거의 DATAR를 확대 개편)처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계획계약(Plan Contract)’과 같은 정책수단에 의한 지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를 새롭게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V. 실천방안 및 정책건의사항



V. 실천방안 및 정책건의사항



1 실천방안

1) 광역도시계획체계의 정립

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의 의무화

- 대·중·소 도시권별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으로 통합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

계획기간의 조정

-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20년으로 규정 → 계획의 신뢰성 저하
-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을 각각 10년과 8년으로 조정하되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라 각각 5년과 4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 시행계획으로 연결되는 3단계의 계획체계를 정립
- 공간계획체계의 단순화와 계획의 집행력을 제고

관련 법률의 개정

-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필요



1 실천방안

2) 지역 간 연계 · 협력사업의 촉진

연계 · 협력사업의 발굴 및 재정지원

- 연계 · 협력사업의 발굴, 협의, 조정, 합의도출, 사업화 등에 긴 절차와 시간 소요 → 사업의 상시적 발굴과 지원이 필요
- 연계 · 협력사업은 ‘광역 · 특화 · 자율 · 협력’의 원칙을 지향하면서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채택되 선정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행 ·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계 · 협력사업의 경쟁을 유도
- 연계 · 협력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광특회계에 연계 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지역 연계 협력기금을 설치 · 운영하는 방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연계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 관련부처의 협력 및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지역발전위원회’는 연계 · 협력사업의 발굴, 행 · 재정적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 연계 · 협력사업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와 세출예산 차등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계 ·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



1 실천방안

3)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 및 권한 확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의 효과를 평가하여 규제특례의 부작용이 적고, 전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규제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 특히 규제특례의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례, 『농지법』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의 효과를 적극 검토

지방정부의 계획고권(計劃高權)과 도시관리의 자율성 확대

- 도시용 토지의 공급과잉과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개발허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도시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개편 추진
- 영국은 『분권화 및 지방화에 관한 법률』의 입안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계획 권한과 책임의 강화를 강조



2 정책건의사항

1) 지역개발관련 법령의 통폐합 및 단순화

국토의 난개발 및 過開發 방지

- 현재 각종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법률은 모두 39개에 달하고 있음
- 이들 법률에 의해 지정된 각종 지역·지구 수는 55개, 총 지정면적은 127,808km²로 남한 면적의 1.3배에 달하나 사업지구 면적은 0.4%에 불과하여 국토의 난개발과 과개발을 초래

관련 법률의 통합정비

- 국토부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등을 우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2011. 9)
- 이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특정산업육성에 관련된 법률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도시개발에 관련된 법률의 통합뿐만 아니라 지경부, 행안부, 농림부, 문체부 등의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법률도 대폭 통폐합하여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정책건의사항

2)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

선도산업 육성의 성과

-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산업은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재생 에너지, LED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해 왔음
- 선도산업의 육성을 통해 1단계 사업(2009.7~2011.11)에서는 총 14,401명의 고용창출과 7조2,421억 원의 매출, 33.3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

선도산업 육성의 한계

- 문제점은 지원프로그램의 복잡 및 지원대상의 중첩, 산·학·연 협력의 미흡,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및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 신성장 동력 산업 위주의 지원 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선도산업의 육성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산업정책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동성과 지역산업 육성여건의 악화를 초래

지역산업의 특화 및 일자리 창출

- 시·도별 또는 대·중·소 도시권별로 산업집적도, 특화도, 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주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역의 기업유치정책을 적극 지원
- 금형, 주조,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도금, 소성가공, 용접 등 제조업기반 뿌리산업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화산업으로 육성
- 고용효과가 매우 큰 의류·봉제, 신발, 인쇄, 귀금속·보석, 안경, 가방, 도자기, 가구, 악기, 점토, 치기공(齒機工) 등의 도시형 숙련집약형 산업의 육성



2 정책건의사항

3) 중앙정부의 차등지원 정책체계 구축

☞ 지방의 고급 일자리 창출

-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과 지방대학 교수들의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을 2~3년 연장하여 고급두뇌의 지방정착 기회를 확대
- 기존 지방기업 및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금융,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 운용 시 지방의무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확대 지원 등이 필요

☞ 저발전지역의 내발적 발전역량지원 강화

- 소도읍 및 도서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의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신활력사업' 과 유사한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대책이 필요
- 각 소도읍 또는 저발전지역의 시·군별로 매년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직접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적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
- 지자체별로 내발적 발전역량을 토대로 차별화 전략이 성공한 사례 : 경남 함양군과 전북 완주군 (귀촌·귀농시책을 토대로 인구증가), 경북 봉화군과 경남 산청군(인구 감소추세 완화), 전남 영암군 (활발한 기업유치), 전남 곡성군(기차관광상품으로 관광객 증가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 참조

감사합니다

